
2022년 중구 종합감사 결과

2023. 2.



[감 사 관]

2022년도 중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2.12.19. ~ 12.30.(10일간)
- 감사범위: 2019. 1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보건·위생분야 제외)
- 감사반: 3개 반 22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사업 예산 운영현황 점검, 토목·건축 공사 집행과정 및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동일반복 지적사례 등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각종 보조금 관리 적정여부 및 집행·정산·평가 실태
 - 개인정보보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징수	추급 환급	계	경징계	훈계	
87	42	42	3	-	18/946,468	16/940,272	2/6,196	15/27	3/3	12/24	3

○ 처분요구 내역

(단위: 천 원, 명)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1	인 사	승진인원 산정 부적정	000과	주의	-	훈계0	-	
2	인 사	낙시터업 허가기간 부적정	000과	주의	-	훈계0	-	
3	인 사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 부적정	000과	주의	-	경장계0 훈계0	-	
4	인 사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000과	주의	-	-	-	
5	복 무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	000과 등 28개부서	시정	회수 13,338 추급 4,647	-	-	
6	복 무	병가 사용 부적정	000동 등 9개부서	시정	-	-	-	
7	복 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000실 등 2개부서	-	-	-	기관 경고	
8	일반행정	신고 체육시설업 보험가입 관리감독 업무 소홀	000실	시정	-	-	-	
9	일반행정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훈계0	-	
10	지 방 세	취득세(지점중과 등) 부과에 관한 사항	000과, 000과	시정	추징 107,131	훈계0	-	
11	지 방 세	취득세(지목변경, 등) 부과에 관한 사항	000과, 000과	시정	추징 116,300	-	-	
12	지 방 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000과, 000과	시정	추징 72,191	-	-	
13	지 방 세	주민세 부과 관리 부적정	000과, 000과	시정	추징 5,991	-	-	
14	세외수입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000과 등 4개부서	시정 주의	추징 21,400	훈계0	-	
15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000과 등 9개부서	시정	압류 479,252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16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금 체납처분 관리 부적정	000과 등 6개 부서	시정	-	-	-	
1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000과 등 2개부서	시정	회수 182 추급 1,549	훈계0	-	
18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000과 등 2개부서	시정	-	-	-	
19	사회복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000과	주의	-	-	-	
20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000실 등 13개부서	주의	-	-	-	
21	개인정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000과 24개부서	주의	-	-	-	
22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미흡	000실	주의	-	-	-	
23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000 등 19개부서	개선	-	-	-	
24	농·축 산	불법전용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000과	시정	-	-	-	
25	농·축 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장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	-	
26	농·축 산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	-	
27	농·축 산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	-	
28	농·축 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000과	시정 주의	-	-	-	
29	해양수산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VtV 발급 절차 미흡	000과	시정	회수 3,411	-	-	
30	해양수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업무 소홀	000과	시정	-	-	-	
31	해양수산	어항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000과	시정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32	해양수산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	-	
33	보 조 금	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 미적용	000과	주의	-	훈계0	-	
34	보 조 금	보조금 집행 부적정	000과 등 3개부서	시정	화수 17	-	-	
35	보 조 금	보조금 사업 공모절차 등 미이행	000과 등 3개부서	주의	-	-	-	
36	보 조 금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부적정	000실 등 5개부서	주의	-	-	-	
37	공유재산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관한 사항	000과 등 3개부서	시정	-	-	기관 경고	
38	예산.회계	직장운동경기부(펜싱) 운영에 관한 사항	000실	주의	-	-	-	
39	예산.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000과	주의	-	훈계0 경장계0	-	
40	예산.회계	하자검사 관리 소홀	000과 등 12개부서	-	-	훈계0	기관 경고	
41	예산.회계	공공시설 분수수집관 대행유에 관한 사항	000과 등 2개부서	주의	-	-	-	
42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000동	주의	-	-	-	
43	예산.회계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소홀	000실 등 4개부서	주의	-	-	-	
44	예산.회계	공공예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000과 등 4개부서	시정	화수 30,163	-	-	
45	예산.회계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000과 등 2개부서	시정	-	-	-	
46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000실 등 4개부서	주의	-	-	-	
47	계 약	000과 일원 도로시설정당사주에 관한 사항	000과	주의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48	계 약	공사의 품질시험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49	예 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실 등 4개부서	주의	-	-	-	
50	보 조 금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과	주의	-	-	-	
51	건 설	안전헬스(이동식) 설치단가 산출 부적정	○○○과	시정	회수 3,721	-	-	
52	건 설	폐기물처리용역 운반단가 산출 부적정	○○○과 등 2개부서	주의	-	-	-	
53	건 설	공사완료의 공고 등 미이행	○○○과	시정	-	-	-	
54	환 경	폐기물처리업자 등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과	시정 주의	-	훈계○	-	
55	환 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지도·감독 소홀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56	환 경	개인하수처리 및 중수도시설 지도감독 소홀	○○○과 등 2개부서	주의	-	-	-	
57	환 경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과 등 5개부서	주의	-	-	-	
58	환 경	○○성당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감독업무 및 설계변경 부적정	○○○과	주의	-	경장계○ 훈계○	-	
59	건 축	건축물 마감재료 등 확인 소홀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60	건 축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관리 소홀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61	건 축	건축 설계공모 관련 사항	○○○과	주의	-	-	-	
62	건 축	신기술·특허공법 관한 사항	○○○과	시정	회수 62,949	-	-	
63	안 전	추락방지 안전시설 구조안전 확인 소홀	○○○과 등 2개부서	시정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64	건 축	건축물 경관심의 및 해체의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000과	주의	-	-	-	
65	건 설	도로점용허가대장 작성·관리 소홀	000과 등 2개부서	시정	-	-	-	
66	교 통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소홀	000과 등 2개부서	시정	-	-	-	
67	건 설	00지역 호안 및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 감독 소홀	000과	시정	회수 9,350	-	-	
68	건 설	00동 공영주차장(단체) 조성공사 감독 소홀	000과	주의	-	훈계0	-	
69	공원녹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000과	개선	-	-	-	
70	공원녹지	가로수 원상회복 협의 소홀	000과	시정	-	-	-	
71	공원녹지	보험료등 사후정산 미흡	000과	시정	회수 12,577	-	-	
72	공원녹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000과	시정	-	-	-	
73	공원녹지	2022년 중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000과	시정 주의	회수 2,299	-	-	
74	공원녹지	00000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000과 등 2개부서	권고	-	-	-	
75	에 너 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000과	시정	-	-	-	
76	지역경제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000과	시정	-	-	-	
77	지역경제	건설기계 관련 행정처분 소홀	000과	시정	-	-	-	
78	지역경제	고재처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미흡	000과 등 2개부서	주의	-	-	-	
79	공 사	전기공사 관련 업무수행지침 미준수	000과 등 2개부서	주의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승진인원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과)에서는 20**. *.*. 인천광역시 행정*급 일반승진자 ○명(○○○), 근속승진자 ○명(○○○) 등 *명과 중구청 행정*급 일반승진자 ○명(○○○, ○○○), 20**. *.*. 인천광역시 행정*급 근속승진자 ○명(○○○)과 중구청 행정*급 일반승진자 ○명(○○○)에 대해 전입·전출의 방법으로 각각 인사교류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을 감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하며,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

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20**. *.**, 및 20**. *.**, 인천광역시와 행정*급 전입·전출 인사교류시 인천광역시로부터의 전입자중 행정*급 근속승진자의 경우는 자체 근속승진자와 달리 직제상 정원의 증감없이 *급 현원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근속승진시와 같이 승진된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잘못 계상하여 총*회에 걸쳐 행정*급 ○명을 과다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근속승진자에 대한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각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낚시터업 허가기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과)에서는 국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낚시터업을 허가 및 변경허가 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 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낚시터업 허가시 해당토지 등이 국유재산인 경우 대부기간 및 사용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부기간 및 사용허가기간 내로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 ○○동 ****-**, ****-**의 경우 대부기간이 20**.**.**, **까지 임에도 낚시터업 허가기간을 국유재산 대부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 **까지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국유재산 대부기간 및 사용허가기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낚시터업 허가기간을 부적정하게 허가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 계·주의(훈계) 요구

제 목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에 따라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교육훈련의 내용 등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구에서는 매년 ‘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간교육시간과 집합교육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교육실적을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에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점검하여 오류 및 부정 입력을 방지하는 한편 오류 및 부정입력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며, 승진심사 시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적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실적 중복승인 등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여 ㄱ 외 〇명은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실적 중복승인 제외 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승진 의결되는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1. ㄱ의 경우

위 사람은 ㄱ, ㄴ, ㄷ의 승진 의결에 대해 당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외에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으나, 대상자의 해당 직급 전체기간의 교육훈련 실적 전체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ㄱ, ㄴ, ㄷ의 교육훈련 중복실적을 인사위원회 의결 당시에 알았더라면 승진심사에서 제외했을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본인이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열심히 근무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ㄱ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해당 업무를 정확히 처리할 의무가 있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 따라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확인은 승진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점,

특히 20**.**.*. 승진의결된 ㄱ은 승진의결일 기준으로 교육훈련 필요시간(○시간)과 인정시간(○시간)이 22시간 차이이고, 20**.**.*. 승진의결된 ㄴ은 교육훈련 필요시간(○시간)과 인정시간(○시간)이 불과 ○시간 차이이며, 20**.**.*. 승진의결된 ㄷ는 교육훈련 필요시간(○시간)과 인정시간(○시간)이 ○시간 차이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복실적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위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자가 승진 의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징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ㄴ, ㄷ의 경우

위 사람 중 ㄴ은 20**년~20**년 기간 중 중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인 ㄱ의 직속 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였고, ㄷ는 ㄱ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자였다.

이에 위 사람들은 ㄱ의 직속 팀장 및 부서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및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 ㄱ과 함께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의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징계] 공무원 교육훈련실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위 ㄱ에 대해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위 ㄴ, ㄷ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20**.**월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직(운전○급),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시험위원) 제1항에 따르면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없이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만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별도의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없이 채용 업무 소관부서인 ★과에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이 직접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향후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 시, 별도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등 28개 부서

내 용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직 기간별로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가 부여되고,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받지 않은 자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자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연가일수가 부여된다.

또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가 보상비 지급일수를 [표1]과 같이 결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1] 2019년~2021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최대 12일 범위 내	최대 20일 범위 내(코로나19로 인한 연가 미사용 여건 감안)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1.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일수를 [표2]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표2] 연가일수 재산정 계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text{(1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자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2항 발췌

따라서 중구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2]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일수를 부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연 15일을 초과한 병가 사용자 및 휴직자, 장기교육 파견자 및 연도 중 임용자 등에 대해 연가일수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연가일수 재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2. 연가보상비 과다(과소) 지급 및 봉급 일액 미감액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규정」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표2]의 계산식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 또한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결근 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2]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한편,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구 소속 공무원 중 병가·휴직·장기교육·퇴직준비교육 파견자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및 봉급 일액 감액 등 현황을 살펴보면,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연가보상비 과다·과소 지급 및 봉급 일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8,494,370원과 봉급일액 미감액분 4,844,510원은 회수 하시고,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4,647,320원은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병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동 등 8개 부서

내 용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하고, 그 중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야 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 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 휴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나. 병가 - (3) 병가의 운영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병가 사용 승인 시 허가권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규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은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이 필요한 기간 등 의학적 소견이 적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소속 공무원의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동일 질병에 대한 병가 승인에 대해서도 진단서 등을 통해 병가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〇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없이 동일 질병을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연 〇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해당연도 연가보상금액 회수 또는 봉급 일액 감액 및 연가 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 〇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연가 공제일수’를 반영하여 연가보상금액 회수·봉급일액 미감액분 회수·연가 공제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 〇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기간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는 병가 기간을 반드시 공제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과

내 용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구 소속 직원 통행료 지원사업 부적정 지급’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0**.*.**,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20**.*. 중구에서 재심의를 요청하여 20**.*.**, 재심의 결과(기각)를 통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5항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인천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20**.*.**, (○-****호), 20**.*.**, (○-****호), 20**.*.**, (○-****호), 20**.*.**, (○-****호) 등 총 ○차례에 걸쳐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총 ○회에 걸

친 법률자문 외에 그 어떠한 사항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제19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중구 후생복지 조례”라 한다)」에 대해 중구에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고, 당시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처분결과 이행을 연기해 왔으며, 지역적 특수성으로 통행료 환수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로 인한 조직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환수 처분을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통행료 지원금의 성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월정액 형식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구에서 20**.*.*.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조례 사전보고(◆-****호)’를 보면, 당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 제6조제3호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뿐 소속 공무원에게 고속도로통행료를 지원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인천광역시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위배에 따른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할 여지 조차 없었다 할 것이고,

위법한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례가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중구 후생복지 조례」 제6조제3호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례의 무효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통행료 지급 건이 취소되면 수익자인 중구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상 원인 없이 통행료를 수익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환수 처분요구’는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중구 후생복지 조례」의 효력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구에서는 현재까지도 통행료 지원금을 보수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보수·수당 등 근무조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헌재 1992.4.28. 90헌바27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무조건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헌재 2017.8.31. 선고 2016헌마404 결정문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체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점,

舊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는 2000.12.29. 개정·시행(대통령령 제17051호) 시까지 수당의 종류를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2001.1.29. 제명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1113호)」으로 개정하여 기존 수당 체계에 ‘실비보상 등’을 추가하였고, 개정이유를 통해 수당 외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령상 지급근거를 신설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통보조비도 실비변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서 신설된 점,

이후 2011.1.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20호)」 개정을 통해 공무원 수당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화 하고자 기본급에 통합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였고, 舊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산입되어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 따라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는 바, 중구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고속도로통행료는 해당 공무원이 지출하여야 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취지는 도심과 영종도로 구분된 중구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수당’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임이 명백한 점,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19-***, 20**.*.*.*. 회신)를 보면, 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게 최장 ○년간 월 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울릉군의 지역적 여건에 따른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울릉군으로 발령받은 공무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보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비 지급에 대해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20**.*.*.*. 중구의 고속도로통행료 지원 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회신(지방인사제도과-6157호)한 점 등

을 고려하면 고속도로통행료 지원금은 ‘보수’가 아니라는 위 의견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구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통행료를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지급한 바,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년 *월부터 지급연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중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처분결과 이행을 연기해 왔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해 기관경고하고, 향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 등을 엄중 문책하기로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관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하오니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신고 체육시설업 보험가입 관리·감독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면사무소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읍·면사무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 제26조(보험가입)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보험가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¹⁾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제1항 각 호²⁾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및 제40조(과태료)에 따르면

1)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시·도시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행정처분)에 따라 3일의 영업정지³⁾를 명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등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시설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손해보험 갱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장항목 및 금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중구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 ○개소의 손해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에서는 ㉠ 등 ○개소의 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체육시설 보험가입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한 ◎학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중구는 ㉠ 등 ○개소의 보험증권은 감사 기간 중에 업체로부터 제출받았으며 보험가입의 되어 있지 않은 ◎학원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영업정지 3일 / 2차:영업정지 10일 / 3차:영업정지 20일 / 4차:영업정지 1개월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前 ○과)는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가.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내부심의 미실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학교 교육경비 선정기준표4)’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자부담 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적으로 내부심의를 실시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우선순위 등 검토(안)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4) 2019년 : 신청사업에 대해 파급효과(수혜자)(15점), 필요성(25점), 시급성(25점), 자부담 확보비율(15점),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수혜 현황(20점) 등 5개 분야를 점수로 평가·심의
2020년, 2021년 :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30점), 사업의 시급성(25점), 자부담 확보(10점), 교육환경 여건(15점), 교육경비 수혜현황(20점) 등 5개 분야를 점수로 평가·심의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1차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의기준표’에 따라 내부 심의를 실시하고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작성된 검토(안)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9년~2021년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중구에서는 선정기준표에 따른 1차 내부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현장실사에 따른 검토결과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소홀한 사실이 있다.

나. 학교별 지원상한액 초과 지원 등 보조금 지원 형평성 저해

‘2020년, 2021년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 중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학교별 보조금 지원상한액⁵⁾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책임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지원) 금액별로 자부담 확보율(금액)을 [표1]와 같이 정하고,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내부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지원금액별 자부담 비율

보조금 신청(지원)금액	자부담 확보율(금액)
25,000천원 이상 40,000천원 까지	30% 이상 (7,500천원 ~ 12,000천원)
20,000천원 이상 25,000천원 미만	20% 이상 (4,000천원 ~ 5,000천원)
15,000천원 이상 20,000천원 미만	15% 이상 (2,250천원 ~ 3,000천원)
15,000천원 미만	10% 이상 (1,500천원)

※ 자료출처 :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발체

따라서, 중구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지원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5) 2020년 40,000천원 이내 / 2021년 30,000천원 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내부심의 시 보조금 지원액 삭감 및 지원 제외 등을 검토하여 학교별 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중구에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2020년, 2021년 교육경비 보조금 검토(안)’을 확인한 결과,

중구는 각급 학교에서 지원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 ‘심의기준표’에 따른 내부심의 없이 세부 지출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2020년에는 ●학교 등 ○개 학교에 2021년에는 ●학교 등 ○개 학교에 지원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자부담을 미확보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등 ○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를 사유로 보조금 지원 제외를 검토한 반면, ●학교에 신청한 ‘△△ ■■■■■ 캠프 운영비’는 ‘심의기준표’에 따른 내부심의 없이 임의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자부담 비율 ○%를 삭감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중구에서 상정한 검토(안)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학교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울러, 자부담비율 ○%를 제외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학교의 ‘△△ ■■■■■ 캠프 운영비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중구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교부하여 결국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2021년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부적정

중구는 2021년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 중 ‘신설학교 개교경비(교육환경개선사업)사업’은 2020년~2021년 신설(예정) 학교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개 학교에 각 학교별 ○○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어떠한 내부검토 없이 지원대상 학교가 아닌 2019년 개교한 ■중학교를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 보조금 00천원이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2. 자기부담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시급성과 함께 자기부담금 비율을 반영한 심사기준 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급식시설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각급 학교는 보조금 대비 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의무적 부담하여야 한다고 계획하였다.

아울러, 2020년, 2021년에도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내부심의 시 자부담 확보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지원)금액별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부담금 확보율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학교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선정·결정한 경우 각급 학교로 하여금 지방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여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9년~2021년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에서는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사업⁶⁾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정산·반환토록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기간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재정산한 결과 총 00천원의 보조금이 정산·반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보조금 정산검사 미 실시 등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제11조의2(보고 및 검사)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사용을 종료한

6) 2019년 19개 학교 22개 사업 / 2020년 21개 학교 23개 사업 / 2021년 18개 학교 20개 사업

때에는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⁷⁾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는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통지서 교부조건에는 각급 학교는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업종료 또는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동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만일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

7) 2021.7.13.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년~20**년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년에는 ○개 학교로부터 ○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중구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촉구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각급 학교로부터 정산보고와 함께 사업비 집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20**년~20**년 지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중구는 각급 학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을 때 사업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주 의]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선정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취득세(대도시 내 지점중과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중과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개발(주) 법인이 —○가 **~**번지, 토지 ***.m², 건축물 ***.m²를 ○○원(이 건 부동산)에 20**.**.**. 매매 취득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점 설치(인천광역시 중구 —○○번길 ○○(—○가))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도시내 지점 중과세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75,193,250원을 부과 누락 한 사실이 있다.

2. 자경농민(부재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확인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토지 ***㎡에 대해 취득세 등 18,000,00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3. 청소년단체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따르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연맹이 인천광역시 중구 ■가 ○○번지 건축물 연면적 $***.***m^2$ (1층 $***.***m^2$, 2층 $***.***m^2$, 3층 $***.***m^2$) 중 ○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8,681,42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생애최초 주택자에 대하여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에 따른 전입신고 및 계속하여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동 *****번지 ***동 *** 등 ○개 부동산의 취득세 등 4,268,15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5. 차량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인천○○ ****호 등 ○개 차량의 취득세 등 988,89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과세 누락된 대도시 내 법인 지점중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107,131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과세 누락되는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중과세 부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지목변경, 고급오락장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2과

내 용

1. 지목변경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

한 ○○동 ***-#번지 (주)□ 등 ○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51,657,44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2. 고급오락장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급오락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나목에 따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법령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개소의 취득세 등 26,968,49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레저시설이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증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증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증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증인일을 말하고, 사용증인서 또는 임시사용증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

8)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매개로 취득한 경우 4%의 표준세율(본세)을 적용하되,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인 □의 취득세 등 1,967,52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ㄴ동 **-*번지 등 ○○개소의 취득세 등 10,449,65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과·◇과에서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 *-**번지 등 ○○개소의 취득세 등 25,257,5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과세 누락된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116,3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임대사업자, 건축물 소방분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각각 면제 및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과에서는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임대사업자가 감면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동 ○○호 등 00개소의 재산세 등 5,463,77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2.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이며, 같은 법 제143조, 제14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고, 제2호에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사무실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가 ○○-○번지 표 등 ○명, ○○건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6,259,450원을 부과 누락 한 사실이 있다.

3. 건축물 착공 토지분 재산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0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착공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 ***-*번지 ○ 등 ○○명, ○○건의 재산세 등 15,345,450원을 부과 누락 한 사실이 있다.

4.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재산세 관리 부적정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위법건축물의 과세대상 □동 ***-*번지 흥재단 등 ○명, ○○건 재산세 등 1,514,030원, □과·□과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과세대상 ○○○가 ○○번지 ○○명, ○○건 재산세 등 3,608,620원을 각각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과세 누락된 임대사업자 감면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72,191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며,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분부터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문화원 등 ○○개 사업장에

대한 20**년~20**년 주민세 사업소분 ○건, 5,991,06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과세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 등에 대하여 5,991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훈계)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부서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감경되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 외 3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 등 ○명, ○건의 과태료 21,400,000 원을 미부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하여 21,4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 하시고 바랍니다.

[주 의]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상당 금액의 과태료 본 부과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8개부서

내 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로사용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⁹⁾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 외 8개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0명, 0건, 체납액 479,252,08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압류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체납액 479,252천 원을 조속히 압류하시기 바라며,

② 각 부서에서는 체납처분의 절차로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체납처분(시효결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5개부서

내 용

「지방행정재정부과금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태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¹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징수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10)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납입고지와 「민법」 제168조의 각 호에 따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구 ▲과 외 5개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에 따른 시효결손을 하여야 함에도, 체납액 30만원 이상 ○명, 체납 ○건, 체납액 534,640,111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시효 경과된 ○건, 체납액 534,640천 원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재산압류, 회생채권, 법원경매 등)에 따른 시효 경과여부를 재검토하고 검토결과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결손처분 하시기 바라며,

② 각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에 따른 체납처분(시효소멸)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관련 서류를 신청등록하고, 군·구는 이를 즉시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민원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는 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보완 요구와는 별개로, 접수 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신청일의 자동부여는 물론, 새올 민원행정 시스템에 급여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부여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바, 신청조사에 따른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대상 확인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때 조사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그 결정의 요지, 급여종류·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 내용이 수록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1항, 관련 지침에 따라 수급권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되는 바, 군·구 통합조사 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류의 등록·접수, 공적자료 등 조회요청 및 결과반영, 생활실태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지체없이 수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조사업무 수행에 무엇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 확인 결과, ‘신청서 접수, 자료조사 요청’ 등 절차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신청조사 부적정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구 ▲과, ▲과 □팀에서는 신청등록 즉시 접수처리해야 할 ㄴ 등 ○명의 신청서류를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처리하였고, 이러한 접수지연은 신청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요청 되어야 할 공적자료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요청, 주택조사 요청 지연과도 맞물려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회신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침에 따라 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하고, 추가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처리 되도록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일에 민원완료 처리를 해야 함에도,

ㄴ 등 ○명은 ‘서울 민원행정시스템 - 민원처리 - 민원진행상황처리-보완보정처리, 처리기한연장’에서 민원처리기한을 30일씩 *회 연장하여 법정처리기한(30~60일 이내)을 초과한 **일로 변경하거나, 신청자별로 *회~*회에 걸쳐 보완보정등록 및 수정하여 처리 기한을 최대 **일까지 변경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민원처리 연장사유 확인결과 신청인 ㄴ, ㄷ, ㄱ, ㄴ, ㄹ은 ‘민원폭주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을 사유로 처리기한을 *회 연장하여 **일로 변경하였고, 이들 중 ㄴ, ㄱ의 경우 조사담당자가 신청조사를 위해 신속히 요청해야 할 주택조사를 접수일로부터 각각 **일과 *일이 지나서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조사요청 지연은 신청인 ㄴ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는데, ㄴ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민원처리기한일인 20**. *. ** 에서야 주택조사를 지연 요청하면서 처리기한 당일에 ‘기관부서 회신지연’을 사유로 연장처리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ㄱ, ㄴ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에 따른 신청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사결정 **일과 ***일 전에 각각 서울민원행정시스템의 민원사항을 완료로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중구 ▲과, ▲과 □팀에서는 수급자 신청에 따른 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명에 대한 급여 지원시기도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들 중 ○명은 생계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바, 신청조사 담당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들에 대한 신청조사 업무를 지연처리함에 따라 뒤늦게 급여 선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정기 지급하고, 만일 수급자의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 생성 기준일인 매월 15일 이후이거나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급여 지급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

성된 급여내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되, 만일 생계급여 신청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수급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실제소득으로 반영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기초 생계급여와 우선 지원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긴급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해당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 지급해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신청월 기준 소급 지급 소홀,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착오 산정 등으로 인해 ○건의 급여가 과소 혹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생계급여 부적정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구 ▲과에서는 기초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을 중복 신청한 자에게 선 지급된 긴급생계지원비를 차감하여 기초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수급자 ㄱ, ㄴ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착오 산정하여 00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수급자 ㄷ, ㄴ에게는 생계급여 0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며, 기초연금과 기초 생계급여를 신규 신청한 ㄹ에게는 수급자 선정 월인 20**. *월에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 시, 신청 월인 20**. *월분부터 소급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 000원이 과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182,980원은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1,549,100원에 대하여는 지급조치 하시고, 향후 생계급여 지급지연, 과소·과다 지급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부적정

중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신고되어 운영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후원금 관리 분야의 ‘후원 제한’ 사항으로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토록 규정한 바 있으며, 2022년도 지침에서는 후원금 모금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군·구에서는 후원금 모금관련 개정사항을 지역아동센터에 명확히 안내하여 센터 내 후원금 모금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에 무엇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중구 지역아동센터 ○개소 후원금 모금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립 지역아동센터 ○개소를 제외한 개인운영 지역아동센터 ○개소에서 *년간 이용아동 보호자 ○명으로부터 총 0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ㅎ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모금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ㅎ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보호자 ○명(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대상 ○명, 일반대상 ○명)으로부터 총 0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후원자 ○인당 후원규모는 월 00천원부터 00천원씩 지속적으로 후원하거나, 일부 후원자의 경우 1회당 00천원, 000천원, 000천원씩 일시금으로 후원하여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총 00천원~000천원을 모금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후원금 관리를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전반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중구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지역아동센터의 이같은 후원금 모금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산보고서 제출(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 후원받은 순서대로 명확히 기록 관리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군·구와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같음하며, 만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승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군·구의 보고서 공개의무 또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공개] 현황 확인 결과,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결산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전년도 미보고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구립노아동센터 등 ○개소에서는 보고서 제출 기준일로부터 *일~***일이 초과된 시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연제출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보고서가 제출된 당일에 승인하거나 승인시점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아동센터 등 ○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에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음에도 관련부서인 ♠과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에 따른 반려·승인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구립트요양원 등 ○개 시설에서 제출된 보고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승인해야 함에도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승인처리하였는데,

특히 ☒아동센터와 ㉡아동센터의 경우, 20**년 보고서가 20**. *. **과 20**. *. **에 각각 제출되었음에도 보고서 제출시점으로부터 *년이상인 경과된 이듬해 *. **에서야 뒤늦게 승인함에 따라, 승인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 또한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 사회복지시설의 연도별 결산보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결산보고서 제출시 후원받은 순서대로 명확히 기록 관리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가 작성·보고되어야 함에도 명세서의 누락, 착오 작성, 시스템상 회계처리 미반영 등으로 후원금 세입·세출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채 보고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여과없이 공개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에 대한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의 명확성 확보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후원금 수입·사용내역과 결산액의 차액이 확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보고서를 재정비하시고, 만일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작성 시, 후원금의 수입·지출을 가감없이 명확히 작성하고 해당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승인 등 후원금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 등 재판정기한 도래자의 의무적 재판정 업무가 업무처리 개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되는 사항을 등에 안내하고,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에 제출하는 등 재판정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토록 해야 하는 바, 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 충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정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촉구기한 내에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 제5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전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구청장 권한에 속한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장애진단사항 확인’ 사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였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이 위임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 ◎과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 소홀, 재판정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바,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의 업무처리 상태를 지속 관리·독려하고, 재판정 절차 미이행 등 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조속히 완료처리 되도록 행정절차 단계별 이행여부 확인 철저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촉

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기한 내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재판정 지연 등 업무 처리절차가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ㄱ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 장애인 ㅎ 외 ㉠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고, ㄴ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기한 도래자 ㄴ 등 ㉠명에게 재판정 및 촉구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ㄱ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대상자 ㅈ 외 ㉠명에게 재판정 기한 *개월 전에 재판정 통보를 해야 함에도 통보기준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 재판정 이행을 통보하였고, ㄴ동 등 ㉠개 동에서는 ㄲ 외 ㉠명에게 재판정 기한 1개월 전 해야 할 촉구 통보를 통보기준일로부터 *일에서 최대 **일 경과 시점에서야 시행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사전 통지, 청문실시, 장애등록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ㅋ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기한 경과자 ㉠명을 청문 및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없이 대상자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는데, 특히 ㅋ동, ㅌ동, ㅊ동, ㅍ동에서는 장애 재판정 기한일이 경과된 ㄱ, ㄴ, ㄷ, ㄹ, ㅎ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일, ***일, ***일, ***일, ***일이 경과된 뒤늦은 시점에서야 재판정 처리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ㄱ동 재판정기한 경과자 ㅎ의 경우 재판정기한일인 20**.*. *.로부터 *년여간 재판정처리가 되지 않자, 20**.*. **월부터 20**.*. **월까지 재판정기한 경과처리 안내를 시 ▽과로부터 ㉠차례, 중구 ▼과로부터 ㉠차례에 거쳐 통보를 받았음에도 ㄱ1동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재판정기한일로부터 ***일 경과시점에 재판정 등록을 하는 등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매우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ㄱ1동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ㅎ동 등 *개 동에서는 기한경과자 ㉠명에 대해 감사대상기간 중 인천시와 중구 관련 부서로부

터 처리안내 통보를 1회 이상 받았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 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재판정 처리하거나, 대상자가 장애인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에도 중구 ◎과에서는 재판정관리 철저와 결과제출 요청만 통지하였을 뿐, 재판정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체 없이 이행완료되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촉구 통보 및 재판정 기한 경과자에 대한 청문실시, 장애인등록 취소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외, 12개부서

내 용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중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0**년 *월 수립하여 같은 해 *월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대표 홈페이지 등 ○개 시스템은 관리계획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나 이행실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20**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미흡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를 통해 법령 준수사항을 지표로 구성해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전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는 다음 해 1월 통보되며 같은 해 2월 말일까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 그 결과를 해당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20**년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항목별 추진사항만을 등록하였고 20**년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으며, 20**년, 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이행 소홀’, ‘내부관리계획 내 다운로드 기준 책정 여부 누락’ 등 동일한 개선 요구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점검 미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중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개인정보총괄담당 부서인 ▲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21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이후 같은 해 *월 한차례 □실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점검 실시 결과 제출(□실-***)’ 문서를 ▲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에 시행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2022년 *월부터는 □실에서 매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계정 점검 요청’ 문서를 시행하였

으나, 점검결과를 제출받지 않고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결재 후 보관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접속기록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과 외)에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등 ○개의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도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위탁사항 미공개 등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시 점검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위탁사항 공개 등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23개부서

내 용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46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 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도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제공 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를 회신하면 이를 기록·관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중구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발체

그러나 중구에서는, ■과 등 ○개 부서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았고 ◁과 등은 개인영상정보 운영방침에 표기된 보관기간과는 다르게 파기 기록을 관리하고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였으며 수사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파기결과를 문서로 제출받아야 하나 일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반드시 기록·관리하시고, 운영방침에 표기된 보관기간에 맞게 파기기록을 관리하고 자동 삭제의 경우도 파기 기록을 기재하며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파기 결과를 회신받아 파기 기록을 기재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발체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한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실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현행화 여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여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에 대해 <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문서를 시행하지 않고 자체 점검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현황자료만 메일로 전달받는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변경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확인한 결과, 운영·관리 부서별 CCTV 설치 대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등이 현황과 다르게 게시되고 있고 <과, ◀과 등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신설 또는 업무 이관으로 추가되는 부서의 운영·관리 방침이 누락되어 있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18개부서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①설치목적 및 장소 ②촬영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 (예시)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종 복도(360°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32-000-0000)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3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췌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口동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과 등에서 설치한 안내판에는 설치장소,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안내판을 소홀히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개 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반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 하시고, 안내판에 설치장소, 수탁관리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안내판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불법전용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불법전용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불법전용 농지 적발 시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같은 법 제58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고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인정될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과(現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불법전용 농지 ○건을 적발하여 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고발 및 농지처분의무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행정절차법상 절차 미준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충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구청 □과(現 ✱과)에서는 ○건의 불법 농지전용 적발 건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적발 이후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고발, 농지처분의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등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62조(양벌규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년 *월 *일부터 전년 *월 *일(*년간)까지의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

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각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정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지법 개정사항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2022.8.18.)

아울러, 같은 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항에서는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과(現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명령 및 유예 농지 ○건 중 농지원부(現 농지대장)가 없는 ○건을 제외한 ○건 중 ○건에 대해서만 농지원부 경작확인결과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농지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관련 정보가 농지대장(舊 농지원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농지대장 현행화(정비)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청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영업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 허가 및 신고된 축산물 영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0조(위생교육) 제2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¹¹⁾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20**년도 ○개소에 대한 위생교육 관리 및 관련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1)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관리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소홀

중구청 *과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의 영업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영업의 등록)¹²⁾ 및 제34조(영업의 허가)¹³⁾를 받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과에서는 등록 및 허가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하여 매년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 대상업소 총 ○개소^(20**년~20**년) 중 ○개소에 대해 미점검(점검율 **.*) 하였으며, 특히 동물운송업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동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반려동물 영업자 교육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소홀

「동물보호법」 제37조(교육)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12)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해당

13) 동물생산업 해당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중구청 ✱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매년 교육을 받도록 관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교육이 끝난 날 부터 *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교육 관리 및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및 허가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연 ○ 회 이상의 점검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관리와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업무 소홀

중구청 *과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1호)」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제3항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청 *과에서는 20**년 *월 **일 위촉되어 20**년 *월 **일자로 위촉기간 *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 ○명(○○○)에 대한 해촉 또는 재위촉의 별도 조치없이 현재 명예감시원 활동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다른 ○명(○○○, ○○○)에 대해서는 2020년 *월 **일자로 위촉한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위촉기간 *년이 만료

되기 전에 20**년 *월 *일자로 다시 재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동물명예감시원 위·해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실적(활동) 관리 소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1호)」 제4조(명예감시원 활동)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규정 제7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에 의해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명예감시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중구청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월까지의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하여 위 규정의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명예감시원 ○명에 대한 재위촉 또는 해촉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별 위촉기간 및 활동보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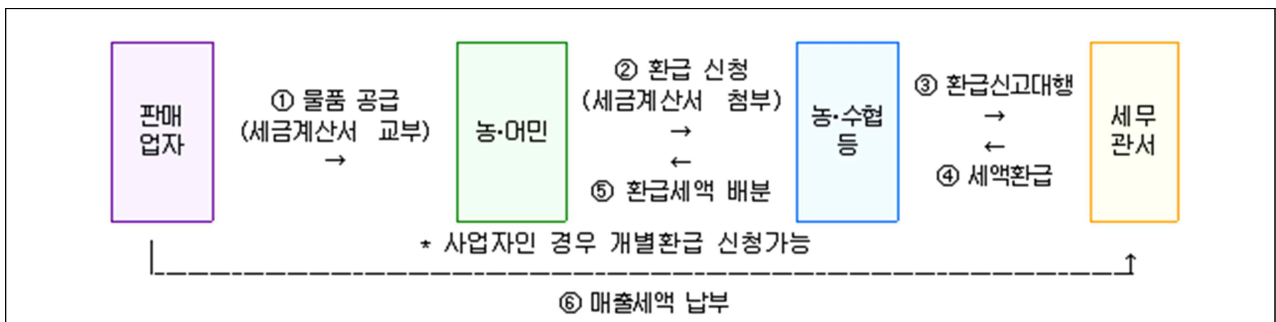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과 같이 환급할 수 있다.

【표 1】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란”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 관련)

9. 어선용 구명부기·구명동의·구명뗏목·구명정(救命艇)·구명부환(救命浮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는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④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상기 1~3번의 어민 및 당해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2/3 이상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 시행 완료 후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받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20**년 남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은 후, 시비 보조금 3,411,780원을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반납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제5조의 ‘원산지 표시’ 위반(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또는 제6조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3조(교육이수명령) 제1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에게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2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에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하지 않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어항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어항”은 광역시장이 어항관리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광역시장은 지방어항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 관리 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방어항 관리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중구에서는 관할 어항시설의 안전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파손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항이용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의 폐기물 수거 등의 어항 청소를 시행하여 매 분기 어항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매 분기 1회 이상 어항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어항시설 점검부, 어항시설 관리부, 어항 청소실적 기록부에 각각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지방어항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그 결과 등을 기록·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 어항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어촌·어항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신속히 어항시설 관리 및 사용상황 조사를 하고 안전관리 시설 보강 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어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인천광역시 수산종자 방류 세부 지침」 제19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 담당 공무원은 납품 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된 후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한 뒤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란 같은 지침 제12조제①항에 따라 종자생산 확인 기관(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관내 종자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자생산 확인 신청을 받아 어미 사육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종자 생산자의 자가 종자생산 확인 후 그 결과를 발급하는 것이다. 즉 종자 생산자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자의 자가 생산한 종자 외 다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종자를 납품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지침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센터소장은 종자 생산자의 자가 종자생산 확인을 위하여 종자생산 확인 기간 이외에 수시로 확인·지도를 할 수 있으며,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 물량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10일 이내에 센터소장에게 그 증빙서류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산종자가 전량 폐사하거나 방류, 판매하는 등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관(군·구)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후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지구별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 기간 어구 제한,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자생산자의 자가 종자 생산 여부 및 수량 확인 등을 위한 종자생산납품 확인서 관리와 종자방류 수역의 사후관리는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나 중구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방류수역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및 방류결과를 미통보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지구별 수협 및 어업 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 기간 어구 제한,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방류결과를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 미적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내 용

중구 읍과에서는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및 유통하여 수산식품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제8조,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 사항¹⁴⁾을 제외하고는 공모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금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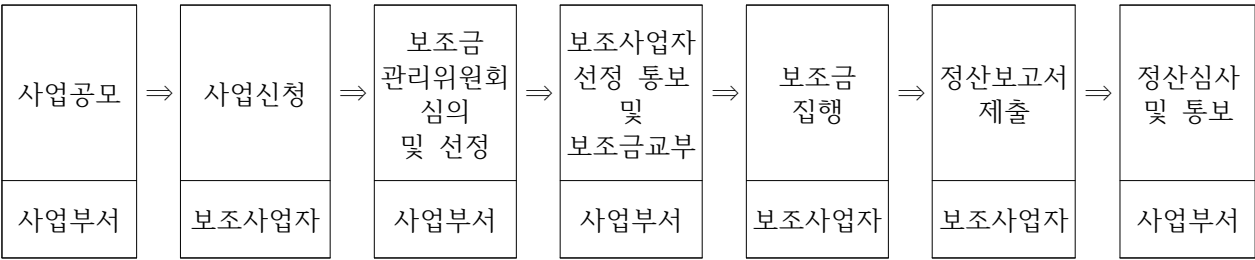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

14)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2] 지방보조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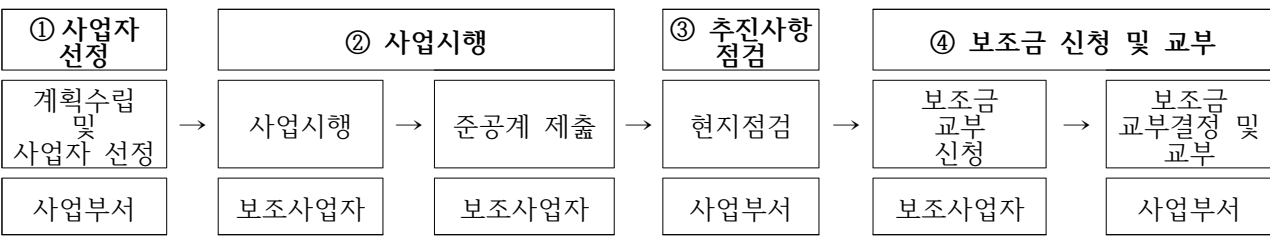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법」 내용 발췌

▶ (先) 사업집행, (後) 보조금 교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 이행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②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면, ③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 적정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방보조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3]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추진 절차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이 사업 선정부터 정산까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외 2개부서

내 용

중구 읍과 외 2개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봉사단’ 및 ‘♻️봉사단’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협회 인천○지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담당자 및 대표자 결재가 누락되었고, 지출결의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상이하였다.

2. 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단’ 및 ‘☯협회 인천○지회’는 견적서 등 자부담 지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아 자부담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봉사단’은 지출된 영수증만 제출하여 지출목적 및 구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였고, ‘☯연합회’는 마스크 및 식대를 현금으로 집행하였다.

3. 집행 부적정 및 지출증빙서류 미흡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거래의 사실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인 ‘☯협회’는 ‘☐위원 전문화 교육 워크숍’을 추진하였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워크숍 개최 비용을 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결재 없이 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비는 1인당 00원을 지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고, 계획서 등 워크숍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집행 증빙자료로 결제 내역만 첨부하여 워크숍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연합회’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 간식비 명목으로 **시 **분에 주류 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나. 지출증빙서류 미흡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은 지출증빙 자료로 견적서만 구비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확인증 등이 없어 업체에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청소년육성보호활동사업’은 홍보물품 구입 및 버스 임차 등을 추진하였으나 결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고 캠페인을 전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가 없으며,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출금액과 견적서 금액이 상이하는 등 회계처리가 부적정하였다.

4.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미사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협의회 등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5.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협회)는 소득이 발생하는 강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미징수된 소득세 17,6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지방회계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조금 사업 공모절차 등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과 외 2개부서

내 용

1. 공모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모(公募)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는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읍과 및 ○과에서는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 및 ‘청소년육성

보호활동사업'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공모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공모 및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심사 과정도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청렴사용서약서 미제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 등 ○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통장사본 제출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전용통장은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야 하고, 통장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육성보호활동사업’ 등은 자부담이 있으나 자부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통장을 앞면만 제출하고, 입출금 내역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였고,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가 0원이 아닌 통장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통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4. 교부 결정 및 통지, 심사 이행 미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및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년에는 교부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교부결정을 통지하였으며, 20**년 및 20**년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한 이후에 교부결정 결재를 득하였고, ○과에서는 20**년에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를 미이행하지 않았다.

5. 정산 심사 및 통보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담당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외 4개부서

내 용

1. 보조금 교부조건 기재 미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및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내용을 교부조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조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실 등 5개 부서에서는 ‘구민화합 한마당 생활체육 대축전’ 등 ○개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일부 사항만 표기하거나 관련 내용 전체를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였다.

2. ‘보조금 사용방법’ 표기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에 지방보조금은 지방보

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실 및 ○과에서는 ‘구민화합 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 등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여 보조금 사용방법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만 안내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보조금은 금액에 상관 없이 현금 지출이 불가하나, ‘중구○회 운영비 지원’ 등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불가피하게 현금을 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여 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조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기관경고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부족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센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포함한 ○개 시설을 설치하여 2017.**.*.부터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용허가)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인 유상·무상대여)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에서도 청소년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은 「공유재산법」 및 「인천광역시 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센터’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경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중구에 공유재산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20**.**.*.~20**.**.*.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

였다.

중구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인]센터는 관리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2017.10.23.)」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에서도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 수행기관이 공익법인 등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F부모회 등 ○개의 단체에는 무상으로 임대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구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경제청으로부터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과-*** (20**.*.**)호]에서 ‘중구 위탁사무 수행기관을 상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무상)는 불가하여 유상사용’ 토록 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청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중인 중구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 정]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직장운동경기부(펜싱)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읍실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구정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Ω)를(이하 ‘Ω팀’이라 한다.) 운영하고 있다.

1. ‘우수선수 유치비’ 소득세 부과 소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한편 국세청 소득세과-1005(2010.9.27.) 및 원천세과-1006(2009.12.7.)에 따르면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 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¹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Ω팀을 위한 우수선수를 「인천광역시 중구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3조(임용)에 따라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 근거한 등급별로 지급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20**년~20**년 기간 동안 지급하면서, 우수선수 유치비가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받는 계약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를 적용한 사업소득¹⁶⁾에 대한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2. ‘펜싱장비’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분할계약의 금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

15) 근로소득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1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20**년~20**년 기간동안 Ω장비 물품을 구매하면서 연간 소요량에 대한 산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금액을 건당 0천만원 이하로 상·하반기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한 사실이 있다.

게다가 특정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각각 분할 발주·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으로서 다수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펜싱선수들이 지급받는 우수선수 유치비가 「소득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되어 납부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②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나누어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 계 ·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ㅂ은 20**년 *월 **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과에서 통·반 조직관리 및 행사지원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ㅈ은 20**년 *월 *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한편, 훈령 별표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중구는 20**년도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통·반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였다.

민간인에게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동 훈령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자에게 운임·숙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요 예산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ㄱ은 우수 통·반장 〇명을 대상으로 1인당 〇〇천원 총 〇〇천원으로 산정하여 20**년 우수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사람은 통·반 행사지원 담당자로서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행사실비지원금)를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세부 산출기초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였다.

ㄱ은 ㉠과 ㉡담당으로서 계획서에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등 세부 산출기초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요예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ㄱ은 20**년 “우수 통·반장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하여 임차료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실비지원금에 일괄 편성·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임에도 동 행사에 참석하는 우수 통·반장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000천원 전액을 첨부된 청구서 및 위임내역을 근거로 통·리장연합회 중구지부 대표 ㄱ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였다.

또한, 첨부된 위임내역에는 위임하는 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및 확인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사람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출장자에게 운임·숙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결과를 검토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을 수령한 자에게 행사 종료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 사람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하고 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징 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태만히 한 위 대상자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요예산 산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훈계) 요구

제 목 하자검사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目과 외 11개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3장 제10절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중 하자검사 실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 ▼과는 연 0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부서에 정기하자검사 실시 통보 문서만 시행하였으며, 하자검사 결과보고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요청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하자검사 실시대상 총 ○○건중 ○건을 미실시 하였다.

이처럼, ▼과는 정기하자검사 운영을 소홀히 하여 사업부서로부터 정기 하자 검사 완료 조서가 미제출되었음에도 촉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 계약 ○○건 중 ○건은 하자만료검사를 미실시 하였다.

한편, 중구는 20**년 *월 **일 ‘◎ 경로당 건립공사(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의 계약건이 중구에서 실시한 정기하자 검사 목록에 누락되어, 그 결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미이행하였으며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계약담당자 및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가 하자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불안전 요소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실시되지 않았고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중구는 「2019년도 중구 종합감사」 당시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정기 하자검사는 총 ○○건중 ○건을 미실시 하였으며, 하자만료검사는 총 ○○건 중 ○건을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중구는 상기와 같이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정기하자검사 실시 통보 문서만 시행한 후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 완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지적되는 하자검사 관리 소홀 사항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효율적인 하자관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하자보증서 등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하자검사 대상 목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 2회 하자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통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미실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관경고] 하자검사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부적정이 지속됨에 따라 엄중 경고 하오니, 향후 하자검사 업무에 대하여 절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훈 계] 위 대상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중화장실 분노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 외 1개부서(이하 “중구”라 한다)는 감사대상 기간에 각각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분노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1. 계약절차 없이 용역 대가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행정안전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

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때 수의계약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000만원 미만에 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실·과 단위에 교부·운영하는 일상경비라 하더라도 추정가격 기준 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비는 ▼과에 계약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용역 시행 시 추정가격 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집행하면서 ▼과에 계약 의뢰 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계약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동일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제5항(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단일사업에 대하여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를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중구는 단일사업(공중화장실 분노 수거)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용역 성격의 경비를 연간계획 등에 따라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월별로 시기를 나누어 발주하여 계약절차 없이 지출하였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회계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3. 용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용역의 완성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감사 기간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소속 공무원 감독 조서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지역개발채권 매입 징수 소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별표117)에 따라 공사·물품·용역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총금액(200만원 이상)으로 1년 계약 후 월별로 대금청구(지급)하는 연간 계약 체결 시 월별 청구(지급)금액이 각 2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대금 청구(지급)시 채권을 매출하여야 하며, 연간 계약 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나 매월 청구(지급)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17)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일까지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외 기간은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계약 체결 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을 전액 매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공중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업무 처리 시 관련 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매월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동

내 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하여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사용자의 자택근처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에서는 2019.11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0건 0천 원을 사용하며,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목적임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며,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동장 외 0명 참석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 품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또한, △동에서는 사용자(△장)의 00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각 부서 및 동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에 대해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외 3개부서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주관 실·과장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의한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에서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정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19.11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과 외 *개 부서의 총 ○건 000천 원에 대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의 구

입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수물품을 취득·사용하였으며,

특히, ■과 외 2개 부서에서는 정수물품내역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의 예산심사 시 부서에서 체육시설 구입·설치 및 정비 등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으로 심사를 받지 않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수물품인 냉난방기를 취득·사용하고, 사후에 정수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수승인 전 물품구입 재발방지를 위해 ㉠실에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정수배정여부 심사를 철저히 하여 정수물품 취득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를 미 준수할 시 예산 반영에 제외하여 사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정수물품 구입절차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수 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 및 취득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수책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공요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부서

내 용

1. 부서운영 계좌관리 소홀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르면 금고의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중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

보유계좌의 점검 및 정리를 위해 분기별로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 자체 점검, 연도별로 공공예금 보유계좌 점검 및 정리를 요청하였음에도,

△과 외 1개 부서에서는 카드결제 계좌 및 부서명의 일반통장(보통예금 통장)을 개설·운영하며, 출납상황과 장부에 대한 검사 및 통장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각 사업별·용도별로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총 ○건 000천원의 통장잔액이 발생하였다.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훈령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또한, 훈령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과와 ●과에서는 시행령 제50조 및 훈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말일 기준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공공요금 보유계좌 점검 및 정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납부자에게 반환조치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환급금 및 세입 미조치 사항 ○건 000천원이 발생하였다.

보관기간 경과 후 미 조치한 세입세출외현금 주요내역으로는 기타보관금 ○건

000천 원, 하자보수보증금 ○건 000천 원이다.

3·1독립만세기념비 및 추모공간 리모델링 미지급 타절준공금 관련 기타보관금 000천 원은 정산잔액 000천 원, 지역개발채권 000천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매입필증을 징구 하여야 함에도 재무과의 계약담당자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았으며, 20**.**.월 현재까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며,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확장공사 타절준공금 관련 기타보관금 000천 원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노무비 000천 원과 □과의 계약담당자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000천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고,

2019년 12월 사교사(○명) 퇴직금 관련 기타보관금 00천 원은 ◆과에서 지급한 아동복지교사 퇴직금 000천 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00천 원을 □과에서 납부하지 않고 보관하여 발생한 잔액이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 ○건 00천 원은 계약담당 부서인 □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받은 사항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납부자에게 반환 또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중,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기간 5년이 경과된 흥전시관 조성공사 하자보수보증금 00천 원은 감사기간인 2022**.**. 세입조치를 완료하여 2023.*월 현재는 하자보수보증금 ○건 000천 원이 보관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 정] ① 부서명의 일반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2,639,783원(▲과 50,000원, ▲과 2,589,730원)에 대해 반환 또는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27,523,389원(□과 ○건 27,499,749원, ●과 ○건 23,640원)에 대해 반환, 납부 또는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카드결제계좌 등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설목적과 상이한 입출금 또는 사업별 혼용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입·출금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보관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하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호 별표3 3. 여비에 따르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 3. 여비 3-3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에 따르면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거래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와 ⊕과에서는 2019.11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공무출장 항공운임 여비 총 ○건 000천 원을 지출하며, 출장자에게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적 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IV. 근무

지의 국내출장시의 여비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 이상 보유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만 마일 이상 보유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따로 독려하지 않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사용 노력을 소홀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만 마일 이상 보유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독려하시기 바라며,

②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 우선 사용 노력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외 3개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감사대상기간(2019. 11월 이후, 이하 같다) 중 ○○건(용역 ○건, 물품 ○건)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입찰공고 기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입찰공고 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별 최소 10일에서 최대 40일까지의 기간¹⁸⁾ 전에 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건의 계약 중 ○건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입찰 공고함으로써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18)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로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을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구 ■과와 ▢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며 ○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전체 배점의 *%를 초과하여 배점함으로써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정하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중구 □실과 b 과에서는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가 충족되지 않은 *인의 평가위원만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동에서는 다른 시·도 위원이 *% 이상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였다.

4.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감사대상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건의 계약 중 ○○건(용역 ○건, 물품 ○건)에 대하여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에 철저를 기하시어 협상에 의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과에서는 ○○기금으로 ‘ㄹ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용역의 분할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럼에도 중구 ◆과에서는 ‘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한 구조 안전진단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약 *개월 사이에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의뢰함으로써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건의 ○인 견적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2. 직접시공계획서 관리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도급금액별 비율¹⁹⁾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에 따라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의 내용이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도급금액별 비율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구 ◆과에서는 ‘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의 건설사업자(계약상대자)가 착공 및 2차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 상 총 노무비의 기재 사항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 총 노무비가 아닌 직접노무비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직접시공 내역(금액)을 기재하였음에도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자(계약상대자)가 1차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²⁰⁾ 시에는 하도급 내용을 반영한 직접시공계획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실시설계 시 특허 공법 반영에 대한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 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구 ◆과에서는 ‘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의 실시설계 시²¹⁾ 콘크리트 단면보수 공종에 특허²²⁾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기술보유자(특허권자)와의 특허 사용협약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인 20**. *. **.에 체결²³⁾함으로써 특허 공법 사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 ◆과-****(2022.**.*)호 「하도급계약통보서 검토 의뢰[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21) 「ㄹ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계약)20**. *. *. (준공)20**. *. **, (준공검사)20**. *. **, (계약금액)00천 원, (계약상대자)주식회사 ㅇ엔지니어링

22) 특허 제***호, (특허권자) ㄴ(주), 주식회사 ㄷ, (주)ㅅ, ㅇ엔지니어링(주)

23) ㄴ주식회사, HL-22-***(20**.**.*)호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협의에 대한 회신」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공사 관련 업무 추진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등 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사의 품질시험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수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20**년부터 ‘☐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원가계산서 및 입찰공고문에 품질관리비 미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의 내용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시에는 입찰공고 등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명시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품질관리비의 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반영되어 있다.

‘ㄱ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는 총공사비가 *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로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원가계산 항목에는 규정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산출내역에는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 사항에는 해당 품질관리비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및 정산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러나 ‘ㄱ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의 설계내역서에는 5. 부대공에 ‘06. 품질시험수수료’와 산출근거를 반영하였으나, 원가계산서 상에는 이에 대한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아 원가계산서 상으로는 품질관리비의 반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중구 ☉과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서가 포함된 설계서를 보완 없이 승인하였고,

중구 ♡과에서는 입찰공고 시 설계내역에 반영된 품질관리비(품질시험수수료) 및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산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낙찰자(주식회사 흥종합건설)가 입찰 시 산정하여 제출한 내역서 상 품질관리비(품질시험수수료)는 당초 설계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부실한 품질시험이 실시될 우려가 있다.

2.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부적정 및 승인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²⁴⁾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의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흥종합건설에서는 공사 착공일(20**. **. *)에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없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중구 ㉡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공사 착공 전 주식회사 흥종합건설에 품질시험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요구하여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24) 1.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ㄱ 관광기반시설(도로) 조성공사’의 공사 재개 전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승인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의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실 외 3개부서

내 용

1.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은 2020. 6. 9. 개정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부칙(법률 제17390호, 2020. 6. 9.) 단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0. 9. 10.부터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실에서는 2022년도 口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총액의 전부(100%)를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미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운용 실무, 5. 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한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이 가능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구 ▢실 및 ▣과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본예산 등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지출이 임박한 시기에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3. 예산의 전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²⁵⁾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및 회계연도 경과 후의 전용과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전용을 제한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은 2020. 6. 9. 개정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부칙(법률 제17390호, 2020. 6. 9.) 단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 *. **.부터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의 전용은 제한되었다.

2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운용 실무, 4. 예산 집행, 예산의 변동, 나.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3) 예산의 변경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용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를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중구 ■과에서는 20**.*.*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B사업’에 대한 전용을 요구²⁶⁾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년 *월 ☒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 따라 관련 용역 비용은 20**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조사가 임박한 시기에 전용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을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기타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면밀히 검토 하시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6) ■과-4762(20**.*.*)호 「예산전용 요구서 제출」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민간단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중구 ㄷ회 등 〇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거래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중구 ㄷ회 등 〇개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 시 개인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출하였고 일부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였으나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또한, 자부담금 집행의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개인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하였고 동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와 지출시기가 맞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나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시 목적 외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시고,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기준 등 관련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안전헬스(이동식) 설치단가 산출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은 운반비, 가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1항에는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과(이하 ‘☐과’이라 한다)에서는 시공사[△△(주)]에서 20**.*.*. 안전웬스(이동식) 설치 신규 공종을 포함하여 제출한 ‘ㄴ해수욕장 친수보행산책로 연장사업’ 실정 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20**.*.*. 시공사에 실정보고 승인 통보하고 20**.*.*.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안전웬스(이동식)는 공사 기간 일시적으로 사용 후 철거하는 시설물로 임대료 또는 손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로 안전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원가계산 시 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 20**.*.*. 시행한 설계변경 서류를 확인 한 바, 안전웬스(30경간) 재료비를 임대료가 아닌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였고 안전웬스(이동식) 설치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이로 인해 ☐과에서는 3,721천 원을 과다 설계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과다 지급된 3,721천 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용역 운반단가 산출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8과, 1과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②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표준시장 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의 운반단가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운반단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 20**. **.부터 추진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운반단가 결정 방법을 확인한 결과 총 ○건(ㄱ과 ○건, ㄴ과 ○건)의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원가계산에 의한 운반단가와 폐기물처리업체 견적단가의 비교·검토 없이 견적단가로 운반단가를 결정하여 용역을 발주하였다.

따라서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한 운반금액 보다 0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의] 폐기물처리용역 운반단가 산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고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사완료의 공고 등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 기구의 지정·운영) 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장 지하시설물 제168조(정의) "지하시설물" 및 같은 규정 제179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관리청의 준공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주요시설물 제원, 지하구조조서, 토공 및 배수조서, 안전시설조서, 부대시설조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 20**. **. 이후 사업 준공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 도로 사용개시 공고,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적확정 측량, 도로대장 작성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ㅎ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건 사업에 대해 ① 공사완료 공고 미이행 ○건, ② 지적확정 측량 미이행 ○건, ③ 도로대장 작성 미이행 ○건으로 공사완료 공고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사업 준공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공고, 지적확정 측량, 도로대장 작성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훈계) 요구

제 목 폐기물처리업자 등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폐기물처리업자 영업정지 처분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 기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수를 산정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1개월~6개월) 및 처리금지 명령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폐기물수집·운반체인 (주)교철거에 20**, *. **, “영업정지 *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 행정처분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주)☆철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정지 *개월에 대한 기간이 부족(*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이행 관리 미흡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참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량, 이행에 걸리는 예상기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량, 이행에 걸리는 예상기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등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주)○○개발 등 ○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위반 등을 사유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처분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 조

치명령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이를 제출받지 않는 등 조치명령 이행 관리에 미흡하였다.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행정처분 정보 미통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제3항에 따르면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 센터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주)○○○개발 등 ○개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에 정보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정보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①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내용(기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②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처분 시에는 법령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명령 이행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田과, 田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田과, 田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구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구청장에 신고(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인에 대하여 신고(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계속해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인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본부 등 ○개소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 등 ○개소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2022. 12.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 및 중수도시설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 □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6조(벌칙) 및 제77조(벌칙)에 따르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법 제8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장준공검사대장(시·군·구 건축관계 부서),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접수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중구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처분현황과 그 밖의 위반건축물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20**년부터 ㅎ 등 ○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안가 위반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중수도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제3항, 제6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내 중수도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중수도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관내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점검을 실시한 시설에 대하여도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중수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건물·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시행하는 등 하수도 관련 지도·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점검주기 준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등 지도·점검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외 4개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 등 5개 부서는 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하였다.

1.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²⁷⁾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Ⅱ.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 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 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가구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가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9개 항목으로 분류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감독자는 철거 대상 건물과 시설물 내 가구, 집기류 등 생활폐기물 방치 여부를 면밀하게 현지 조사하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철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과거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처리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시공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내 매립 또는 방치된 5톤 이상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사(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실정보고 접수 후 폐기물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존에 발주하였던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혼합건설폐기물)에 설계변경 승인함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수의계약 용역의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서의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중구 ▼과 등 ○개 부서는 “중구 ㄷ 건립공사” 등 ○건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ㄱ환경(주) 외 ○개사와 계약체결(폐기물량 ***톤, 계약액 000천원) 하였으나, 폐기물량 추가(*,***톤) 발생 등의 사유로 000천원(증액 000천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중구는 부지 내 방치되어 있던 임목 폐기물(***톤)과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폐토사(***톤) 등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맞게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설계내역서에 반영 또는 설계변경하거나, 신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0천만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구 ㄷ 건립공사 및 ㄱ동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중 각각 부지 내 방치(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에 대하여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수행할 수 없는 폐기물 종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발주 또는 설계변경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물량이 증가되는 내용의 과업 부분을 이행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계약부서에 000천원(각각 00천원, 00천원)이 증액되는 변경 계약을 요청함으로써 증액되는 금액만으로도 입찰대상 금액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 등 ○개사와 수의계약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지 내 방치 또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수의 계약하였다가 사후에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설계 및 감독 업무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계·주의(훈계) 요구

제 목 표성당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감독업무 및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표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였다.

1. 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조사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업무를 포함하는 건설기술로서 건설엔지니어링

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호에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등)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는 20**. *. **. ‘표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중구에서 작성한 20**. *. **. ‘흥회관 철거공사 실정보고 관련 검토 보고’에 따르면 흥회관 철거공사 당시 지상1층 바닥 슬라브 붕괴, 기존 진입로 옹벽 전도로 인해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한 폐기물의 상당량이 지하층으로 매몰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한 콘크리트 파쇄물을 지하 공간에 채워 넣어 지지력을 확보함은 물론 신속한 후속 작업을 위한 시공계획 변경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반출 예정이었던 혼합폐기물(**톤)의 지하매몰분과 지하부분에 채워넣은 콘크리트 파쇄물을 향후 주차장 공사 시행 시 잔여 건축물 철거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중구는 설계용역의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20**년 반출되지 않고 매몰된 혼합폐기물 **톤과 지하부분에 채워 넣은 콘크리트 파쇄물의 물량을 산출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지시하였어야 하고, 이를 준공검사 시에 확인·검토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표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폐기물산출내역서에 산출된 폐기물 물량(**톤)에는 20**년 지하부분에 매몰된 혼합폐기물과 콘크리트 파쇄물에 대한 물량산출이 누락된 채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이에 대한 작성을 지시하거나 준공검사 시 확인·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용역 감독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철거공사 실정보고 검토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①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②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③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5항에 따라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교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범위를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감리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구 공사감독자는 20**. *. **. “교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철거공사의 건축물(화장실 및 카페, 안치실, 상담실, 가톨릭회관 지하 1층) 및 토목시설(도로, 옹벽, 석축 등) 철거공사 누락된 사항의 반영내용의 실정보고를 접수하였고, 철거공사 비용 000천원(계약금액 000천원)을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 *. **. 승인(변경계약 000천원) 통보하였다.

그런데 철거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건축 및 토목시설물 철거물량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 철거공사를 추가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구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하여 도급사에 우선 시공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하에 매몰된 건설폐기물 등 다량의 철거공사 물량이 누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 증가한다는 설계변경 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구는 철거공사 실정보고를 검토할 때에는 추가로 발생이 예정되는 건설폐기물의 수량에 대한 산출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 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신규발주와 설계변경에 대한 유·불리를 검토한 후 최적의 시행방법을 선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구 공사감독자는 철거공사 실정보고를 검토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건설폐기물의 초과 수량, 계약방법(추가 발주 또는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등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특정업체에 수의계약과 같은 과다금액의 사후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중구는 ‘포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

역'에 대하여 20**. *. **. (주)B기업과 계약체결(폐기물량 **톤, 계약액 000천 원)하였으며, 20**. *. *. 폐기물량 추가(***톤) 발생 등의 사유로 000천 원(증액 000천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설폐기물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 위탁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폐콘크리트의 계약물량인 ***톤을 20**. **. *.부터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20**. *. *. ~ **. *. 흙막이 가시설 2차분 시공기간 동안에는 계약물량을 크게 초과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승인 절차 없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다가 20**. *. **. 폐콘크리트가 이미 *****톤 배출(***% 초과)된 상황에서 증가되는 물량을 뒤늦게 확인 후 산출하여 기존 계약업체인 (주)B기업으로 하여금 전량 처리토록 사후에 설계 변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상기 관련자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및 계약예규 제1장 제1절 5.분할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시 당초 매몰된 폐기물 및 지하에 묻혀있던 구조물 등 정확한 산정이 어려웠던 점, 지하 **m 굴착에 따른 흙막이가시설 붕괴방지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진행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단을 결정하는 검토의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를 통해 설계용역 준공검사 소홀, 실정보고 검토 소홀, 계약변경 전 용역 전시행 등 용역 감독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지장물 철거 시 당초 매몰된 폐기물 및 지하 구조물 등 정확한 폐기물량의 산정이 어려웠다는 의견 또한 20**년 매몰 당시 검토서류만 확인해 보아도 대략의 물량이 산출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설계변경 시 물량산출서에도 간단하게 산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 반출 전 사전검토가 어려웠다는 의견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흙막이 가시설 붕괴방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진행되었다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은 용역의 시행방법(추가 긴급발주 또는 설계 변경)을 가시설 공사기간인 약 1개월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용역 과업내용(물량증가)의 변경 전 용역시행으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게 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업무를 처리한 상기 관련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사람 중 ㄱ과 ㄷ은 중구에서 수행한 ‘포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감독 공무원인 ㄷ의 직속 *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및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 ㄱ과 함께 감독소홀 및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및 이 건 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면 징계에 이를 만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징 계] 용역 감독을 소홀히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용역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물 마감재료 등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건축물의 마감재료 확인 소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²⁸⁾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의 개정으로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0항에 따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과)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

28) [시행 2019. 8. 6.][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부칙(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차장으로 쓰려는 건축물 외벽 중 1층과 2층의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료로 계획·사용하였는지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과)에서는 관내 ○동3가 *~***번지, ○동2가 *~*외 2의 경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차장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에 사용한 재료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확인 하지 않고 사용승인 처리를 하여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 및 확인 소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등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소방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소 화 기 구	소화기	1.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자동확산소화장치	1.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 2.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		1.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할 것) 2.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4.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른 것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소유자(건축주 등)이 기재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등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법 및 소방조례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방시설법 및 소방조례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과, ○과)에서는 2019년~2022년 감사일 현재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2항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신고 후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한 관내 ○동 1가 **~** 등 ○건에 대해 단독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물표시변경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 정] ①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천장에 사용한 재료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건축물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소방시설의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 확인 후 소방시설법 등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③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같은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①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같은 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 등)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기한 내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구 ●과와 ○과(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현장확인 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효력이 상실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중구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건축물을 사용(이하 “사전입주”라 한다)하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사전입주, 기간 만료 등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효력상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전입주, 기간만료 등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취소, 효력 상실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축 설계공모 관련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에 따라 설계비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1. 설계공모 시행 소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을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 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19년~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한 총 ○건의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을 설계공모 시행공고 시 미공개,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지 않는 등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라는 설계지침 개정 취지를 소홀히 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였다.

2. 설계공모 운영 소홀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설계지침을 2021. 8. 1. 개정하였다.

개정된 설계지침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따라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라고 한다)에 참석 심사위원 명단 및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0조(평가)제4항 및 제34조(평가)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일반설계공모 및 제안공모의 평가에서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

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지침개정 후에도 공모 심사 시 단순히 평가점수 고득 점순으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심사결과 공개 시 설계지침에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세움터를 통해 공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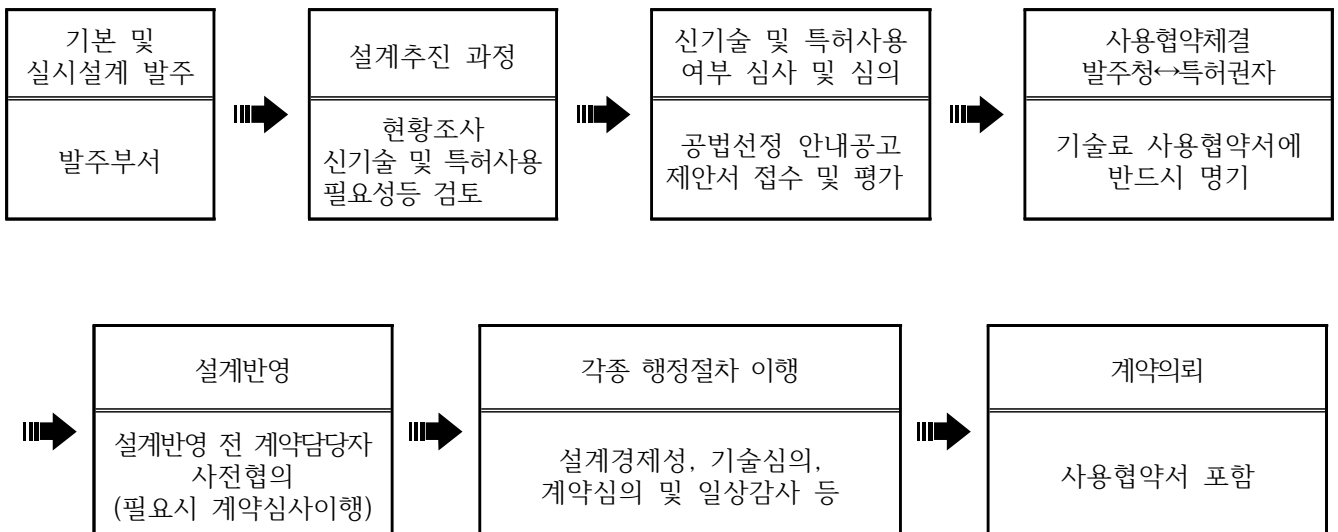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2. 제한요령-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제한요령-다) 및 라)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계약업무는 ①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② 발주부서와 신기술·특허공법 기술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 간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이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검토·선정 미이행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2.-다-2)-라)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특허공법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 자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법을 검토·선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구 ■과에서는 ‘口동 주민편의시설 건립공사’를 추진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지반치환과 관련한 특허공법(피즐쏘일)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20**.**.*. 설계용역을 준공하였다.

■ VE 제시의견

설계허용지내력이 **KN/m²로 설계되었는데 일부 구간은 기초하단레벨이 매립층에 위치하므로 지반치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 바람.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신기술 등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의 추정금액이 0억 원 미만으로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법선정위원 회의를 통한 공법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기술 등에 대해 검토·선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미이행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2.-다-2)-다)에 따르면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준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동 주민편익 시설 건립공사’의 평판재하시험 보고서²⁹⁾를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허용 지내력 ***KN/m²를 만족함에 따라 향후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해당 공정에 대해 감액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설계허용 지내력 확보를 확인 후 특허공법(****)에 대해 설계변경 (감액: 62,949천 원)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에서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추정하고, 재하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상 구조물의 침하량을 예측함으로써 더욱 경제적이고, 안정된 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의뢰·실시한 보고서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추락방지 안전시설 구조안전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중구(■과, ■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에 대해 (건축허가)협의 처리하였다.

【표 1】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건축협의 현황

연번	허가번호	대지위치	주차장 위치(층)	주차장 구분	추락방지 안전시설	충돌조건 구조 설계 반영여부	비고
1	20**-건축과-신축허가-**-	○동1가 ***-*	1 ~ 3	부설주차장	범용 안전시설	×	■과
2	20**-건축과-신축허가-**-	○동3가 **	1 ~ 7	부설주차장	범용 안전시설	×	■과
3	20**-건축과-신축허가-**-	○동7가 ***-*	1 ~ 7	부설주차장	범용 안전시설	×	■과
4	20**-건축과-신축허가-**-	○동7가 ***-*	1 ~ 9	부설주차장	범용 안전시설	×	■과
5	20**-건축과-신축허가-**-	○동7가 ****-*	1 ~ 8	부설주차장	범용 안전시설	×	■과
6	20**-허가민원과-신축허가-**-	○동 ***-*	1 ~ 4	노외주차장	기타 안전시설 기동정착형	×	■과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제12호에 따라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구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이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제4조(설치위치)에 따르면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지침 제5조(구조안전)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구조계산)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이하 “범용안전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면 세부지침 제7조(범용안전시설)에 따라 [표 2]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되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범용안전시설 구조설계 기준

충격력	충돌위치	충격력의 분포 폭
250 KN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상	자동차의 범퍼 폭 160cm 이상

세부지침 제10조(기타안전시설)에 따라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표 2]를 충족하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와 ■과(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범용안전시설로 설계한 [표1,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건축협약의 현황] 연번

1~5의 경우 [표 2]의 충돌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구조 규칙 제9조의2(구조계산)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검토 없이 (건축허가)협의 처리하였다.

또한 기타 안전시설(기둥정착형)으로 설계한 [표 1] 연번 6의 경우 철골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의 기타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표 2]의 충돌조건에 건널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하되 구조규칙 제9조의2(구조계산)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협의 처리하여 추락에 대한 자동차의 안전 및 추락방지 시설의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주차장 건축물의 추락방지시설의 차량 안전 및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검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축물 경관심의 및 해체의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개 재정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지내 '세대 공감지원센터 및 지역어울림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공감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다.

1. 경관심의 미이행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시사,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및 광역시의 군수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등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따라 ①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 따라 중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흥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시가지경관지구에 위치하므로

「경관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중구(☉과)는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건축물 해체 허가(협의) 미이행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ஹ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둥, 바닥 및 기둥 등 증설 및 해체 등의 대수선을 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경관심의 및 건축물 해체허가(협의)와 관련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대장 작성·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중구 ㉠과 및 ㉡과(이하 “도로점용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담당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점용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차량진출입로의 확장·축소·폐지, 지상시설물의 이설·철거 등에 대한 점용실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의 경우 민원 접수부터 허가 처리

및 착공계·준공계 점수와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진출입로 점용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없는 실태이다.

따라서 도로점용담당부서에서는 관내 도로점용실태에 대하여 자체조사 또는 용역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용역 발주 등 추진방안을 검토하시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이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구 ◆과 및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영주차장은 ○개소이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개소 중 ○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중 ○개소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크기를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관련규정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법정 설치 비율 및 크기를 충족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역 호안 및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6항에 따라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구 ㉑과에서는 트해변 일원 호안 및 촌 동쪽마을 해안도로 구간이 대조기 및 폭풍 등에 의해 시설물이 파손됨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역 호안 및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이하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 *. **, 완료하였다.

이에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 주공종인 월파방지시설 준공(시공)도면을 확인한 결과 월파방지시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임에 따라 20m 간격으로 시공 이음을 설치하고 이음자재는 고무판(t=10mm), 백업재(Ø12mm) 및 조인트 실러(JOINT SEALER) 등을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월파방지시설 시공 당시 지반보강(육상DCM³⁰⁾) 양생기간 및 수도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1일 시공량 레미콘 확보 어려움(1회 타설량 불규칙) 등을 이유로 고무판이 아닌 합판을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주요자재 공급 관련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 조사 및

30) D.C.M공법(Deep Cement Method): 연약지반(점성토, 사질토, 유기질토) 내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안정처리재를 저압으로 주입하면서 연약토와 안정처리재를 특수 교반기의 회전에 의해 교반 혼합하고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이용하여 원지반 내에 고화시켜 원주형 및 직사각형의 말뚝체를 조성하여 차수공, 토류공, 기초공 지반의 안정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법

시공품질 확보 여부, 공사량(물량) 변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시공사 임의로 합판만 설치하여 시공이음을 시공하였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한 시공이음 공중에 대하여 감액 설계변경(약 9,350천 원, 제경비 포함)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트 해변 월파방지시설 구간 중 ○개소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사업구간 내 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미 시공된 공중에 대하여 환수(9,350천 원)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동 공영주차장(2단계) 조성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조달청과 B건설(주) 간 계약(관급자재 납품)된 미끄럼방지포장재의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서(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에 따르면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은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

와 시공에 적용하고, 적용장소가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보행로, 산책로, 테마거리,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은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격서에 인용되어 관련 지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규정 중 『단체표준규격(미끄럼방지포장재-SPS-F KTS-1102-1890:2020)』에 따르면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수지와 골재를 사용하여 도로 포장면에 용착하여 자동차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주는 미끄럼방지포장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구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ㄱ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 **. **. ‘ㄱ동 공영주차장(1단계) 조성공사’ 완료 및 20**. *. *. ‘ㄱ동 공영주차장(2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ㄱ동 공영주차장은 총 ○면(일반주차구획 ○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면)의 주차구획으로 조성되었는데, 감사기간 중 ‘ㄱ동 공영주차장(2단계) 조성공사’ 준공도서를 검토한 결과 설치된 주차구획(○면)의 바닥표면에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차장 바닥표면 시공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주차공간의 바닥표면 재질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끄럼방지포장 등에 대한 관련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급자재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은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 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자재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에서는 주차장공사 감독업무 수행 시 주차공간 바닥표면에 미끄럼 방지바닥포장재의 시공이 필요한지, 관련근거가 적정한지, 설계서(규격서, 지방서 등) 공종이 현장에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관급자재 구매 계약 및 시공함으로서 약

00백만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① 공사·용역업무 관계공무원에게 업무수행지침, 관급자재(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표준규격서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감독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

제 목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ㄴ근린공원 중앙광장 서측부에 야외공연장(이하 “ㄴ공원 야외공연장”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³¹⁾」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에 따르면 공원관리청³²⁾과 공원수탁관리자³³⁾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등의 공원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공원녹지조례’라 한다)

31)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 제정(2010.11.5.),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전 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2015.5.12., 2020.7.3.)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9조(허가의 취소 등)에서는 사용허가 받은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환불·면제·감면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별표2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조례 별표2. 4.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 등 공원시설과 야간조경시설·야영장별 사용료는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장은 공원녹지법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별표1 5. 교양시설. 차.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에 따라 도시공원시설의 하나로 정하여져 있고, 「공연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ㄴ공원야외공연장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연에 제공할 목적의 공연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사용 형태가 지역 행사, 집회, 공연 등 다양하여 공원시설의 한 종류인 야외무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하 ‘단체 위임사무’라고 한다)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조례)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른 국가사무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같은 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³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이하 ‘위임조례’라 한다)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관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ㄴ근린공원 내 공원시설의 하나인 중구 **로 ○ 소재의 ㄴ공원 야외공연장을 공원녹지조례에 따라서 관리·운영 및 야외무대 사용료를 징수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중구는 ㄴ공원 야외공연장(2010.4.1. 설치)에 대하여 2010.11.5.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원녹지조례와 다르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도시공원 시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권한이 없는 사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34) ① [대법원, 99추85, 2005.30.]공원조례증개정조례안무효: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대법원, 95추32, 1995.12.22.]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개 선] ㄴ근린공원 내 야외공연장(무대)의 사용료 징수 등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시설을 관리·운영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가로수 원상회복 협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에서는 도시경관과 향상, 그늘 제공 및 공해저감을 위해 ○개 노선에 식재된 ○○○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 조성·관리)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행위³⁵⁾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 또는 저해하거나 가로수 조성·관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관리의 행위를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행위자는 가로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승인

35)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가로수의 바깥심기, 6. 가로수의 메워심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30조(원인자부담금)에 따르면 관리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별표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에는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관리청의 승인 전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구 □과는 ‘하자보증기간 내 수목고사 시 동일 수종 및 규격의 수목 신규 식재 하여야 함’ 이라는 협의 조건으로 가로수 협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8조(가로수 점검)에 따르면 가로수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이며,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긴급상황,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는 가로수 협의와 관련하여 원인자와 협의하여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경우 원상복구 상당금액의 도급공사설계비를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승인 전 제출받아야 하고 가로경관 저해 및 가로수 기능 유지를 위하여 가로수 정기 검사 시 원상복구 가로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사 등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자에게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재식재 등 하자조치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원상복구 가로수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보험증권을 제출 받고도 가로수 협의승인 하였으며, 가로수 정기점검 시 원상복구 가로수에 대한 확인과 하자책임 담보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사전 감사 기간 중('22.12.12.~12.14.)에 실시하는 등 원상회복 가로수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하였고 해당 수목의 하자발생 시 처리지연 등으로 가로수 유지관리의 문제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원상복구 가로수에 대해 미제출 또는 다르게 제출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규에 맞도록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등 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보험료등을 ①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②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③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④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산절차에 따라 공사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월부터 20**.*월까지 “2020년 공항신도시 및 **도시 3구역 공원녹지 병해충방제공사” 등 총 ○건의 공사를 정산 준공하면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액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하였어야 함에도 근로자 개인 부담금액을 포함하여 정산 하는 등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이에 대하여 총 금12,577,580원을 과다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ㄷ도시 공원녹지 관리공사(1구역) 등 총 〇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료 사후정산 부당지급액 금12,577,58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건설공사 준공 시에는 건강·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존 공원의 환경개선 등 노후 공원리모델링(정비)을 위한 「B 안심공원 조성사업」 등 O개 사업을 [표1]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1】공원리모델링(정비) 사업 현황

(단위: m², 천 원)

사 업 명	착공일	준공일	면적	사업비	도급사	주요내용
B 안심공원 조성사업	‘20.*.**.	‘20.*.**.	***	000	(주)** **	- 노후 고무칩 철거 및 포장 - 잔디보호매트 포장 - 짚라인, 파고라, 안전난간 등 시설물 설치
2020년도 L 숲체험원 조성공사	‘20.*.*.	‘20.*.**.	***	000	** **개발(주)	- 부지정지 - 야자매트 및 잔디보호매트, 흙콘크리트 포장 - 모래놀이장, 대피시설 그늘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 배수관 및 상수관 설치
H도시 9호 B공원 환경개선공사	‘20.*.**.	‘20.*.*.	***	000	**건설(주)	- 휴게시설(야외무대, 파고라, 벤치 등) 설치 - 수목식재(블루엔젤, 느티나무 등)
O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사업	‘20.*.**.	‘20.*.**.	***	000	**건설 합자회사	- 그늘막, 등 의자 등 설치 - 옹벽, 플랜터 종합안내판 등 설치 - 조합놀이대 2개소 및 고무칩 포장 - 기존 시설물 철거

사 업 명	착공일	준공일	면적	사업비	도급사	주요내용
노후어린이공원 보수보강 사업 (○○○○)	'21.*.**.	'21.**.**.	*** (○○) *** (○○) *** (○○)	000	(주)**조경	- 어린이공원 3개소 리모델링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및 신설 고무칩포장 교체 - 휴게시설 철거 및 신설
2021년도 L 숲체험원 조성사업	'21.*.**.	'21.**.**.	***	000	**** **조합	- 숲속교육장, 교육테이블, 아외체험기구, 웬스, 시설안내판 등 설치
2021년도 H도시 13호 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21.*.**.	'21.**.**.	***	000	**조경	- 파고라, 그늘막 등 휴게시설 철거 및 설치 - 어린이성안노인운동기구, 조합놀이대 등 설치 - 고무칩포장, 잔디보호 매트 포장 - 집수정, 맹암거 등 배수시설 설치
노후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보수보강 (○○○○)	'21.**.**.	'22.*.**.	*** (○○) *** (○○)	000	주식회사 ****건설	- 조합놀이대 철거 및 신설 - 잔디 및 보호매트 설치 - 탄성포장재, 화강석 블록 포장 - 수목식재 등
K 소통광장 조성사업(조경)	'22.**.**.	'23.*.**.	***	000	** **산업(주)	- 기존 시설 철거 - 장미원 조성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1)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³⁶⁾, 2)소규모 공
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주민 의견

36) 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구에서 실시한 공원 리모델링(정비)사업[표 1]과 관련하여 대상 공원의 조성 계획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공원조성계획 현황

공 원 명	공원세부종류	위치	공원조성계획		비고
			최초	최종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재경부53 (06.12. 5)	경제청46 (19.9.30)	
○○○공원	근린공원	인천 중구 ○동 ***~*	재경부53 (06.12.5)	경제청91 (20.11.02)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경제청294 (12.12.28)	경제청46 (19.9.3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인고232 (97.10.11)	경제청21 (18.04.3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인고143 (98.7.3)	경제청206 (16. 9. 12)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인고232 (97.10.11)	경제청21 (18.04.3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재경부58 (07.11. 6)	경제청46 (19.9.30)	
○○○공원	근린공원	인천 중구 ○동 ***~*	경제청294 (12.12.28)	경제청46 (19.9.3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	인고232 (97.10.11)	경제청21 (18.04.30.)	
○○○공원	어린이공원	인천 중구 ○동 ***~*일원	경제청294 (12.12.28)	경제청46 (19.9.30)	
○○○공원	근린공원	인천 중구 ○동 ***~*	인고232 (97.10.11)	경제청21 (18.04.30.)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중구는 ㄷ공원 등 ○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공원시설 위치 및 면적 ② 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등 동선 체계 ③ 공원시설 내 공작물 종류 및 수량 ④ 녹지 면적 등 [표3]과 같이 공원시설을 변경하였다.

【표 3】 리모델링사업 관련 주요 공원시설 변경 사항

공원명	주요 변경 사항	비고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시설 종류 변경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 신설 • 바닥포장 종류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시설 종류 신설(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야외무대, 파고라, 벤치 등) 신설 • 경관조형물 신설 • 수목 배치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휴양시설(휴게소, 벤치 등) 면적 및 시설 변경 • 녹지 면적 및 수목 배치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바닥포장 종류 및 수목배치 및 수량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바닥포장 종류 및 수목배치 및 수량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바닥포장 종류 및 수목배치 및 수량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신설에 따른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휴양시설(휴게소, 벤치 등) 면적 및 시설 변경 • 수목 배치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바닥포장 종류 및 수목배치 및 수량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시설(어린이놀이시설) 면적 및 놀이시설 종류 변경 • 바닥포장 종류 및 수목배치 및 수량 변경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미원 조성 • 휴게시설(파고라 등) 신설 • 산책로 변경 	

※ 자료 : 중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중구에서는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경미한 사항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설치·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성된 공원과 결정·고시된 공원 조성계획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수지근린공원 등 ○ 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원정비(리모델링) 사업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2022년 중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구 □과(이하 ‘중구’라 한다)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소음 감소 효과 등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ㅎ도시 34호 완충녹지(중구 ○동 ***-*)를 대상으로 “2022년 중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이하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미산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산정기준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가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성과품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용역을 준공('22.*.**.) 처리하였다.

그리고 해당 공사를 입찰 시 입찰관련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누락하고 입찰 공고('22.*.*. 입찰공고번호 *****-00)하는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업무를 소홀히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으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준공시점의 공기부족과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05%)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청구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6.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기간 중 우천’을 사유로 계약 기간을 ○일 연장 하였고,

시설물 설치 공사로 식재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하절기(폭염기간) 수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일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구역 *번 출입구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캐비넷형) 이설 지연을 이유로 ○일간 공사를 중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우천 등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공사기간 ○일을 연장하고 수목 활착 등을 이유로 ○일 간 공사를 중지 시키고 이 기간동안 시행자가 작업을 진행하게 묵인하는 등 공종관리에 소홀하였고,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금000천원[000천원×○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3. 준공검사 부적정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는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시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준공일('22.**.**.)을 초과하여 '22.**.**~23.**.*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준공검사하여 금99,070원 상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6호 라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따르면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등은 사용불가하나, 작업 중 폭한·혹서 등을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시공사는 공사 전체 기간(*개월)에 대하여 작업자휴게소임대 비용 000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하였으나 중구는 이에 대하여 폭한·혹서³⁷⁾ 등의 검토 없이 정산하여 금2,200,000원 상당액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37) 혹서, 폭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2022년 기상청 일별자료를 근거로 일 최고기온이 30℃ 내.외인 '22.**.**부터 *.*.*까지 약 한 달과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2.**.**부터 공사준공일인 *.*.*까지 약 한 달은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혹서, 폭한 기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 됨.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다르게 지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 휴게실 임대비) 등 총 금2,299,0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ㄱ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ㄱ도시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항공물류·산업도시 건설, 공항 종사자 및 외국인을 위한 고품격의 주거지 조성(계획인구 133,629명), 공항 및 산업, 물류단지 지원을 위한 국제도시(산업, 업무, 숙박, 관광 등) 건설, 주변 공간의 입지 잠재력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도시 건설을 위해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및 중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면적 19,300,049.1㎡에 한 국토지주택공사(70%)와 인천도시공사(30%)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3.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2006.12월 실시계획 승인 (재경부 제2006-53호) 후 2007.12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12월 1단계 사업 준공, 2014.12월 2-1단계 사업준공, 2015.12월 2-2단계 사업준공, 2016.12월 2-3단계 사업준공 및 2019.12월 2-4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

1. 무상귀속 대상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 제외)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를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공지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원·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고, 같은 조 제13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한 종류이다.

그렇다면 호도시개발사업 중 현재까지 준공검사 후 단계별로 준공된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사업지 내 공공공지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다. [붙임 ‘공공공지 결정(변경)’ 참고]

2. 공공공지 관리청에 대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제3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사무위임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이하 ‘인천경제청 설치 조례’라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에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제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등의 사항³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경제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영종청라사업본부)제7항제14호에 따라 ‘영종·청라국제도시의 공공공지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에게 분장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4호에는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을 포함한다.

국토계획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시·도 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도시계획 조례 제84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³⁹⁾ 중 ‘라)공공공지’가 해당되고, 제2호 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며,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로 한정)’ 사항(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 제4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의 사항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38)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39) 국가 또는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이하 ‘사무위임 조례’라 한다)」 제2조(위임 사항) 제1항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인천경제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고, 공공공지(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한함)의 시유 행정재산 관리·처분 사항은 구청장 및 인천경제청장 모두에게 위임된 사무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국제도시 내 ㄱ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공지는 인천광역시의 사무를 인천경제청장이 수행하여 설치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2호 단서 및 제4호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중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서 제외되고,

그렇다면 인천경제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제14호, 공유재산법 제2조제4호 및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ㄱ도시 내 설치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부동산(토지)과 그 중물재산(수목, 벤치, 파고라 등)의 취득·운영 및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의 관리청(△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공공지의 국공유재산관리 사무는 수행하지만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라 공공공지의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무는 중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중구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구청(□과)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사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별표 단서에 따라 공공공지 관리의 사무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천경제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준공검사 후 단계별로 준공된 2-2단계, 2-3단계, 2-4단계 사업지 내 공공공지에 대하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무상귀속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 이관지연으로 행정불신과 관리부실로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2014.12.30. 경제자유구역법 일부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가로수 포함) 등’ 도시관리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ㄱ도시 내 공공공지는 도로와 상업용지·업무시설용지 사이에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선형으로 조성되어 도로 내 보도(폭 4m)와 결합하여 보행공간의 확장과 보행자에게 그늘 제공 등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향상하고, 수목과 초화류 식재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저감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⁴⁰⁾와 유사한 기능⁴¹⁾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의 본연의 목적⁴²⁾을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녹지로 조성이 완료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공원·녹지와 같이 관할 구청에서 가로수와 함께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대민서비스 증진, 관리 혼선 예방, 일관된 가로경관 조성 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에서 공공공지 관리청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4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제2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산림청, 2020.)」 Ⅱ.가로수의 기능과 역할 ① 가로수는 도로 안전 확보 ②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③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④ 도시환경 개선 ⑤ 생물다양성 증진 ⑥ 경관의 질 향상 ⑦ 쉼터 제공 ⑧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등 치유의 기능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권 고] 시설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하여 ㄱ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권 고] ㄱ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중구 및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하여 관리 권한의 위임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이관(무상귀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2021년 *월부터 2022년 *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만 재차 통보하였을 뿐, 1~2년 이상 개선명령을 위반한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課과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 공장설립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완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완료 신고된 공장에 대하여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장이 멸실되거나 공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課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1985.*월부터 2016.**월까지 공장등록된 ○개소 업체 중 ○개소의 공장이 무단 폐업을 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등록된 공장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 [시 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기계 관련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등록 등)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 ○건에 대하여 *년 *개월이 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직권말소 건설기계 번호판 미반납 행정처분 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내부결재만 시행하고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직권말소 통보 공문을 시행하지 않아 반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 중 위 사실을 파악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2022. **. **. 직권말소 통보하였다.

또한,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반납기간을 ○일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시 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고재처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 중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부대비용의 처리가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⁴³⁾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구 □과, ▲과에서는 2021년 **월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한 사업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 ○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000천원을 재료비에서 공제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함으로써 기타경비,

43) 연산품(連產品) :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 예를 들면, 원유를 정제할 때에 생기는 석유·휘발유·중유·경유 따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와 연동되어 예정금액(도급금액)이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전기공사 관련 업무수행지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중구 □과와 ▲과에서는 관내 전기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야간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조명설비 보수공사 등 총 ○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수행지침」 제155조(자재의 보관관리 등) 및 제156조(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20조(근무요령) 및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일지 등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 ▲과에서는 해당 공사의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 시공자로부터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총 ○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자재청구를 받지 않고 지급(총 ○건)하였으며, 시공자가 지급받은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수불부를 미 작성(총 ○건)하였음에도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감독일지 상단에는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근무시간별로 검측·품질시험 및 행정 등 업무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며, 재시공 및 공사중지에 대한 구두지시는 상세히 기록한 후 별도로 서면지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공사감독일지를 미 작성(총 ○건) 또는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주 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 1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

□ 현 황

- 지역 특성상 지입회사 명의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많아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및 말소 등의 환급 사유 발생


- 소액 건이 많아 무관심이나 실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급신청에 소극적

2022.12.31. 현재

(단위: 건, 천원)

구분	총계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환급	3,908	119,161	6	15,707	2,565	49,173	1,233	48,905	73	3,598	31	1,778

□ 수범내용

- 지방세 환급안내문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환급신청 방법 표기

- 개인 납세자들의 참여로 카카오톡 환급신청의 편의성 증명

- 환급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미지급액 정리 지속 추진

- 추진 성과

2022.12.31. 현재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2021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 급 신 청	230	1,283	120	551	86	394

□ 기대효과

- 환급 절차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

- 신속한 지방세 환급 처리로 세정신뢰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담당부서 : 세무1과 ☎032-760-7230

수범사례 2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

□ 현 황

-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해 납세자들의 셀프등기가 급격하게 증가
- 이에 셀프등기자들에게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

§ 연도별 셀프 등기 현황(전국)

(단위: 건, %)

연 도	전체등기건수 (A)	셀프등기건수 (B)	셀프등기비율 (B / A)
2021	16,778	107	0.64
2020	13,474	65	0.48
2019	12,804	41	0.32

□ 수범내용

- 기 간 : 2022. 1. 1. ~ 2022. 12. 31.
- 대 상 : 취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 등기를 직접 신청하려는 자
- 내 용 :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 안내문 비치 및 교부 (민원지적과 등)
-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

1단계 : 거래계약신고(접인)	⇒	2단계 : 취득세 신고	⇒	3단계 : 등기 신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市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무1과 · 세무2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셀프등기 건수 : 534건(전체건수 11,929) / 4.47% (2022.12.31.기준)

□ 기대효과

-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방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 담당부서 : 세무1과 [☎032-760-7240]

수범사례 3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접수창구」 운영

□ 현 황

- 운영기간 : 2020. 4. 24. ~
- 대 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 설치대상 :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6개 민원부서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운수과, 교통과)
- 사업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접수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담당직원에게 관련 교육 실시 및 제1청사 민원실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區 내 20대)

□ 수범내용

- 2019.11.28.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창구 운영 협조 요청
- 2019.12.24. : 민원지적과, 신포동, 신흥동, 영종1동 완료
- 2020.04.20. : 도시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운수과, 교통과 및 8개 행정복지센터 확대 설치 완료
- 2021.02.16. : 제1청 민원실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 기대효과

-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 관련사진



민원지적과



신포동



신흥동



영종1동



개항동



연안동



운서동



동인천동



도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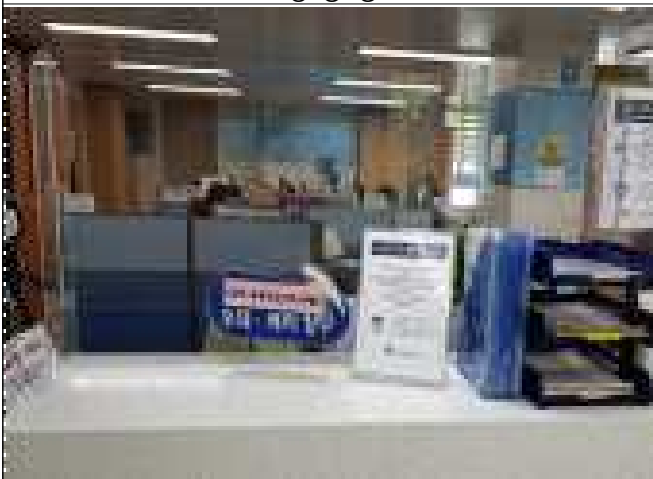
율목동



영종동



용유동



교통운수과



세무1과



세무2과



도시행정과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032-760-7285)

수범사례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 현 황

○ 복지개발비 지원

- 시 기 : 2022. 4월
- 지급대상 : 사회복지기관 100개소 종사자 1,643명
- 지 급 액 : 1인당 10만원
- 집 행 액 : 164,300천원 (집행율 100%)

□ 수범내용

○ 사 업 명 : 복지개발비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 지 급 액 : 1인 10만원(연 1회)

○ 지원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에서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
- 처우개선비 대상 시설, 법인, 단체 이력 합산하여 지원일 기준 근속 6개월 이상 종사자

○ 지급방법 : 종사자 개인계좌 입금

○ 예 산 액 : 164,300천원

□ 기대효과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확보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관련사진

<div data-bbox="159 302 766 593"> <p>한국지침의 이달이 가장 인정받은 4대 분야(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p> <p>인천일보</p> <p>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지역뉴스 사람들 잇츠뉴스 인천일보TV</p> <p>★ > 사회 > 인천</p> <h3>중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h3> <p>이아진 승인 2022.02.20 19:06 수정 2022.02.20 19:06 2022.02.21 7면 댓글 0</p> </div> <div data-bbox="159 616 766 1512"> <p>실태조사 후 지원 계획 수립 소통 창구 '처우개선위' 구성 연수교육·훈련사업 추진도</p>  <p>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아진기자)</p> <p>인천 중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환경 개선에 힘쓴다.</p> <p>20일 인천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p> <p>이 조례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p> <p>이에 구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지원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p> <p>현재 중구에는 총 194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3000여명에 이른다.</p> <p>그러나 이전까지 이들의 지원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p> <p>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방구 구축에 나선다.</p> <p>무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처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p> <p>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지원 계획도 준비한다.</p> <p>이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지원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참고 계획안에 고용 처리와 외부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p> <p>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듣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인 '처우개선위원회'도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790 302 1388 616"> <p>2022년 03월 24일 (목)</p> <p>기호일보</p> <p>정치</p> <h3>인천 중구, 인천지역 최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h3> <p>한동식 기자</p> <p>인천시 중구가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복지개발비)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공시했다.</p> </div> <div data-bbox="790 638 1388 1512">  <p>사진 첨부</p> <p>인천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개발비는 오는 30일 기준 중구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4월 초에 지급한다. 구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p> <p>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명목의 복지개발비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3일 각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p> <p>이날 간담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과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개발비 제도에 대한 이해,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p> <p>각 분야별 대표들은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고충 청취와 사회복지기관 간 코로나19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p> <p>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p> </div>
<p>중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 (인천일보 2022. 2. 20.)</p>	<p>인천 중구, 인천지역 최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기호일보 2022. 3. 24.) 외 12개사 보도</p>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760-7534)

□ 현 황

- 한국의 고령화 사회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으며 인천 중구 또한 2020년 기준 65세 인구 20,531명에서 2022년은 23,366명으로 증가하며 최근 3년간 약 6.6%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여가문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야외 문화 공간으로써 어르신 썸지놀이터를 확대 운영하여 여가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함

□ 수범내용

-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집과 가까운 곳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웃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원예, 생활용품 만들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적은 영종지역에 썸지놀이터를 신규 개소하여 영종국제도시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함
- 어르신 썸지놀이터 신규개소
 - 2021년 기존(5개소) : 답동소공원, 율목공원, 송월어린이놀이터, 영마루공원, 하늘체육공원
 - 2022년 신설(1개소) : 운남공원(영종)
- 어르신 썸지놀이터 확대
 - 2021년 참여인원 1,958명에서 2022년 2,162명으로 전년 대비 참여자 10% 증가
 - 2021년 프로그램 100회에서 2022년 114회로 전년 대비 프로그램 횟수 14% 증가

□ 기대효과

-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참여 활동 확대로 어르신들의 고독감·소외감을 해소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관련사진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032-760-7325

□ 추진배경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출 및 작성 곤란
- 납세자가 지목변경 후 토지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지적부서에 개별적 지가산정 신청이 사실상 어려움

□ 주요내용

- 지목변경 발생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 요청
- 지목변경 확인 후 토지 지가산정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통보받은 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취득세 과세
- 납세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접수처리
- 납세자에게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안내(유선, 문자서비스)

□ 추진성과

- 지목변경 후의 지가 산정 서비스 제공
- 지가부서에서 산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성, 신빙성을 보장
- 기한 내 적극적인 신고납부 유도로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 방지

□ 기대효과

-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누락 세원 원천 차단
- 구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세정 구현

□ 담당부서 : 세무2과 [☎032-760-7723]

수범사례 7

용유지역 해안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

□ 현 황

-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위반건축물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특히 무허가 영업 건축물의 오·폐수 방류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됨
- 「건축법」에 저촉된 위반건축물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음
- 이에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철거)을 통한 적극 행정조치로 시민의 준법정신 제고 및 위법행위 억제함

□ 수범내용

- 2017년 ~ 2022년 : 용유지역 해안가 행정대집행으로 위반건축물 정비

자진정비	행정대집행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0건	38건	67건	27건	23건	26건	8건	249건









※ 100% 정비 완료

□ 기대효과

- 해안가 등의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한 경관 개선 및 환경 정비
-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위법행위 억제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의 철거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

☐ **관련사진**

○ 2022년 행정대집행 추진

철거 전	철거 후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032-760-8937)**

□ 현 황

- 사업대상 : 중구 영종 · 용유 · 무의지역 일원 해양쓰레기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예 산 : 872,760천원(국비 390,380 시비 349,190 구비 133,190)
- 규 모 : 약 400톤

□ 수범내용

- 중구 무의도 및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 운반(40회)
 - 무의도 세레게티 등 차량진입이 불가능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민원이 지속되면서 해당지역으로 진입가능한 운송수단과 접근방법을 강구하여 해양쓰레기 반출에 성공
- 대무의로 굴 패각 수거 · 운반(약 80톤)
 - 40년동안 쌓여있던 굴 패각 수거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12명)
 - 일일누적 1,742명 투입하여 약 157톤 수거
- 해양쓰레기 집하장 공사(2개소)
 - 무의대교 하부 공유수면(면적 : 485㎡)
 - 을왕동 678-185인근 공유수면(면적 : 380㎡)
-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234.4톤)
 - 영종 · 용유 · 무의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104.2톤)
 - 육상으로부터 인천 앞바다에 유입된 해양쓰레기 및 어민이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망·폐어구를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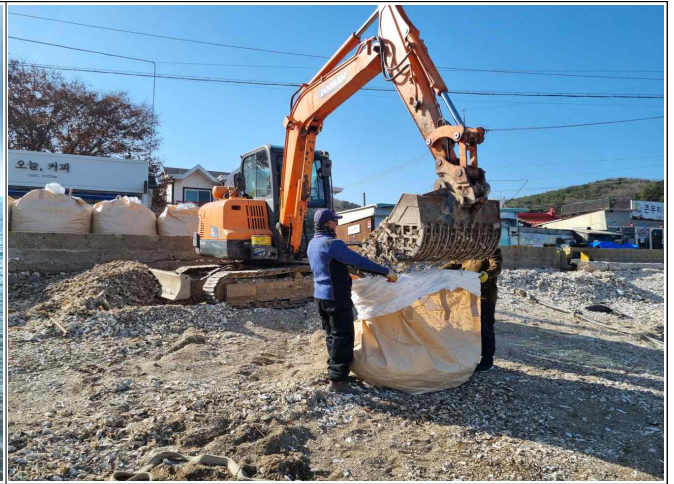
□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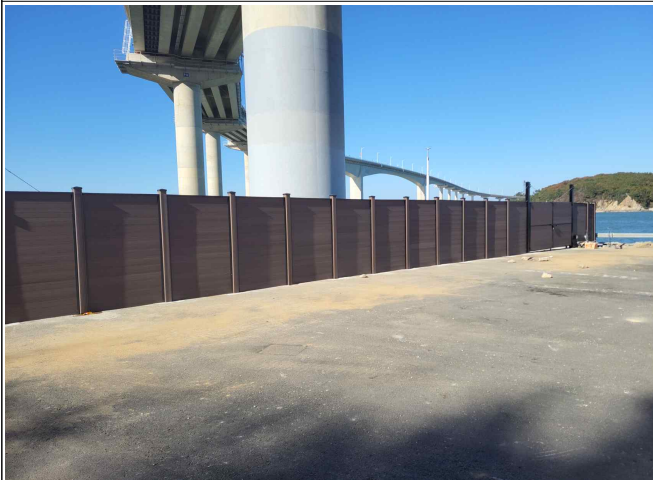
□ **관련사진**



무의도 및 해안사각지대 수거 · 운반



대무의로 굴 패각 수거 · 운반



해양쓰레기 집하장(무의동)



해양쓰레기 집하장(을왕동)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032-760-8872]**

수범사례 9

어촌뉴딜300 사업 수익시설 관리 [큰무리어촌체험마을 사무소 리모델링]

□ 현 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6-3
- 사업기간 : 2020. 9. 2. ~ 2021. 1. 6.
- 총공사비 : 554,749천원(국비 319,725, 시비 68,512, 구비 68,512, 자부담 98,000)
- 운영주체 : 큰무리영어조합법인
- 운영현황
 - 1층 : 카페, 편의점, 큰무리 어촌계 사무실, 홀
 - 2층 : 카페

□ 수범내용

- 어촌뉴딜300 사업 지침에 위반되지 않게 전체 면적 중 수익시설(카페, 편의점)의 면적에 대한 최소 자부담 비율 20%을 충족시켜 건축 하였음
 - 전체 연면적 : 308.94㎡
 - 수익시설 면적 : 223.19㎡
 - 최소 자부담 비율(20%) 이상 분담 여부
 - $554,749\text{천원} \times (223.19\text{㎡} / 308.94\text{㎡}) \times 20\% = 80,155\text{천원}$ (실 자부담 98,000천원)
- 아울러 어촌뉴딜300 사업 지침에 따라 건축물에 자부담을 포함할 경우 공동으로 등기해야 하지만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에 포함된 어촌체험마을 사무소는 중구의 공유재산이므로 공동 등기가 불가능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부담 비율 만큼 무상으로 임대 기간을 산정(6년 11개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 무의대교 준공 이후 방치된 유허건물로 남아 방치된 어촌체험마을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사업에 참여한 큰무리영어조합법인을 관리주체로 지정, 소득시설로 영업을 시작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5억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 어촌마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됨.

☐ 기대효과

- 큰무리영어조합법인의 수익시설 20%이상 자부담에 따른 무상 임대기간 산정으로 임대료 부담경감
- 관광객 편의시설(카페, 편의점) 설치로 지역인지도 향상 및 재방문율을 극대화 하고 무의지역 내 관광객 소비 유도

☐ 관련사진



공사 전



공사 후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032-760-8832)

수범사례 10

「주민 이동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운영

□ 현 황

- 운영기간 : 2021년 10월 ~
- 대 상 : 영종동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내용 : 일시적으로 이동 보장구가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대여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5대, 워커 2대, 목발 2대
- 대여기간 : 1개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1회 연장 가능)

□ 수범내용

- 2021. 4월 : 영종동 주민 복지 욕구 조사 실시
- 2021. 8월 : 영종동 복지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
- 2021. 9월 : 이동 보장구 구입 및 주민 홍보

□ 기대효과

- 영종동 주민의 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 관련사진



□ 담당부서 :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032-760-8890)